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2. 05
VOL. 666

2022년 제21대국회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겠습니다.
국민의 내일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CONTENTS



04



22



24

국회보

2022. 05 / VOL. 666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2년 5월 2일

발행인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전상수 위원장(입법차장)
지동하 위원(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오창석 위원(법제실장)
유상조 위원(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김수옥 위원(의정연수원장)
한웅현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정환철 위원(공보기획관)
현은희 위원(국회도서관 정보봉사국장)
강준희 간사(문화소통담당관)

국회보편집실무위원회

성종호(보좌관), 한주연(비서관), 하상우(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주)이팝 02)514-7567

04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신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국회박물관 개관
'장애물 없는 국회' 사회적 약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확대
국회 본회의,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등 법안 의결

11 특집 - 우크라이나 사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 보호 힘써야 _이광재 위원장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배경 _정은숙
'사이버전', '정보전'의 양상이 주는 의미 _김상배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함의 _조영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_이기동

22 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듣는다

"박람회 유치 성공으로 대한민국 위상 전 세계에 알릴 것"
_박재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의원외교 활성화와 법제도, 예산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
_안병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간사

26 길에서 길을 찾다 _하영제 의원

자연과 문화,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경남 사천·남해·하동

30 의원의 좌우명 _조오섭 의원

역지사지(易地思之)

32 칭찬합시다 _임호선 의원

"현장의 목소리 담겨 있는 정치를 하겠다"

34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박성준 의원

"개혁과 민생이라는 과제에 온 힘 쏟겠다"



26



30



32



34

**표지 이야기**

언제나 웃었으면, 언제나 건강했으면...
서로가 오직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가족이지요.
국회의 바람도 국민 모두의 행복입니다.

36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열어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공직선거법' 등 의결

40 법률 시대를 읽다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
_정성희

42 국회 주재관 리포트

영국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에 관한 법률 개정 사례 _임종수

45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장애인 개인예산제, 기후위기시대 산불 대응 전략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48 법 시행 그 후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50 만화

수익사법 일부개정법률

52 4차산업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고부가 맞춤형 의료산업을 견인하다

54 위원회는 지금

국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상황 점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58 국회 사람들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60 기고

국회박물관 개관 _윤희호
소록도의 두 천사를 만나다 _김근식

65 국회의 꽃과 나무 이야기

서부해당화

66 국회 뉴스**72 이 달의 서평**

뱅크시: 벽 뒤의 남자 _김은정

74 고전의 향연

사나이가 세상에 나설 때엔 행동을 구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_신승운

76 속기록으로 본 의정소사

국회박물관에 전시된 소중한 전원위원회 회의록 _백순정

78 우리 건축 이야기

사찰, 그냥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_임석재

82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태백 대덕산 _유인근

86 바이러스의 역사

새들이 걸리는 감기 '조류 바이러스' _도현신

88 국회 미술관

생명이라는 위대한 서사 _김준기

91 새로 읽는 중앙아시아사

십자군과 몽골군의 공격에서 이슬람 세계를 구해 낸
이집트의 투르크계 맘루크 왕조 _이광태

94 생활 속 우리말글

우리말 안에 스민 영어를 어찌할 것인가 _김풍기

95 정치 관련 주요 일지

박병석 국회의장, 신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재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4월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국민의힘 권성동(오른쪽) 신임 원내대표와 회동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12일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손실보상법’을 포함한 민

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소통과 타협, 원만한 국회를 이루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을 강조할 때



는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 최소한 합리적 중도 성향의 국민까지 포함하는 국민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생 우선의 의정·국회 활동이 중심이 돼야겠다. 그런 점에서 권 원내대표님도 상식과 공정성에 입각하고 특권과 기득권이 없는 국가질서를 만드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시리라 믿는다”며 “민생 관련해서 추경이 미뤄져서 아쉽지만, 코로나 손실로 피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 완전한 손실보상,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제도, 금융 지원, 채무 탕감 등의 조치는 추경과 무관하게 논의하고 뒷받침할 수 있다”고 협치를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월 임시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인적 구성을 갖춰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그러려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개최해 5월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 그리고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주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를 회복해주기 위한 조치를 현 정부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박 원내대표에 화답했다.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합의

이날 회동에서는 그간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다. 우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이 회동에서 ‘시범 실시’ 방안을 제안했고, 양당이 이를 수용했다.

여야는 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에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4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2명, 대한변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식에 합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월 8일 신임 원내대표로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제18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된 뒤 4선을 하며 새누리당 사무총장·전략기획본부장,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어 4월 11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성일종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에 송언석 의원이 선임됐고, 박형수·양금희 의원이 신임 원내대변인에 임명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19일 또 한 번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양당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는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법’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국회박물관 개관

‘헌정기념관’ 전면 공사로 24년 만에 재탄생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이 4월 11일 열린 국회박물관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 전상수 국회입법차장, 김만홍 국회입법조사처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진석 국회부의장, 박 의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일윤 대한민국헌정회장,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류승화 전시유물기증자, 조용복 국회사무차장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박물관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참석자들이 4월 11일 국회박물관 개관식을 마친 후 국회박물관 입구 안내석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일윤 현정회장, 박 의장, 김 부의장,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에 맞춰 전면 개편한 국회박물관 개관 축하 기념식이 4월 11일 국회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상희·정진석 국회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박물관 개관식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역사가 낱알이 기록하고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성취는 물론 어두웠던 국회의 발자국도 후손에게 그대로 전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박물관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개원부터 제헌국회 출범, 헌정중단의 아픔, 그리고 민주화의 도도한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며 국회박물관 개관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또 “우리는 민주 선열들이 꿈꾼 나라를 일구기 위해 아직도 먼 길을 씀 없이 가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

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박물관은 1919년 4월 10일 개원한 임시의정원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회 활동과 의회민주주의 관련 자료를 보관·전시한 제1종 국립박물관이다. 1998년 건립된 헌정기념관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에 맞춰 ‘국회박물관’으로 24년 만에 재개관한 것으로, ‘국회박물관’이라는 새 이름은 국민과 소통한다는 의미로 지난해 3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국회박물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는 국회체험관 및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접수는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https://memorial.assembly.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

‘장애물 없는 국회’ 사회적 약자 맞춤 편의 서비스 확대



박병석 국회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최혜영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이종성 의원(오른쪽 첫번째)이 4월 5일 본회의가 끝난 뒤 새로 설치된 연설대를 시연해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47년 만에 새롭게 개조

국회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발언대가 국회의사당 준공 47년 만에 몸이 불편한 의원들에게 맞게 바뀌었다. 국회는 장애인 의원 및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와 바닥 회전장치를 지난 3월 말 새롭게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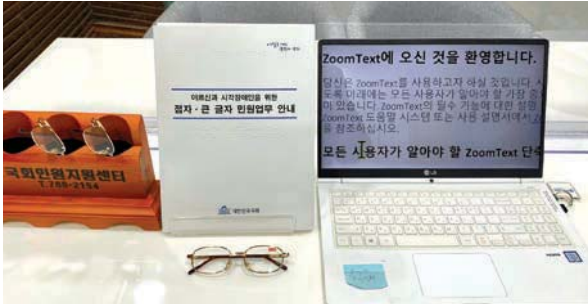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4월 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중에 “본회의장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이 발

언하기 편리하도록 의원 발언대를 개조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휠체어에 앉은 채 국무위원석과 마주보며 질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의원은 발언대의 높이를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회전장치를 작동해 국무위원석과 마주하고 대화할 수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새로 설치된 발언대의 작동을 살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장애물 없는 국회’ 실현을 위한



점자·큰 글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와 화면확대·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공공이용 보청기와 통역 등에 활용되는 스피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20년 국회 의원회관이 BF인증(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제도) 연장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의원회관 정현관에 난간대를 설치하고, 계단 핸드레일 점자 안내판에 위층과 아래층 시설(의원실, 회의장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또 화장실 입구에 점자 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회 민원지원센터, 소외·취약 계층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추진

‘장애물 없는 국회’의 실현을 위해, 국회 민원지원센터도 장애인·어르신 등의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큰 글자 민원업무 안내 책자를 제작해 민원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화면확대·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 공공이용보청기 등을 국회 민원상담실에 비치해 장애인 또는 어르신 방문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인이 민원을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결과도 점자로 회신하는 ‘점자민원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인·외국인 근로자·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및 외국어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회방송, 시각장애인 위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

국회방송도 4월 국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을 전면 실시했다.

국회방송은 그동안 장애인시청지원 의무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등 주요 회의를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지상파방송사업자 고시 기준(지상파방송사업자 장애인방송 고시기준 : 폐쇄자막 100%, 수어 5%, 화면해설 10%) 이상으로 실시해 왔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생중계로 진행되는 회의중계에는 화면해설방송을 적용하기 어려워 일부 프로그램에서만 제공되었고 본회의 등 주요 회의에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방송은 의사중계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부 기술적 검토와 시범서비스를 마치고, 국회 본연의 콘텐츠인 본회의에 대한 실시간 화면해설방송을 전면 실시했다. 📺

국회 본회의,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등 법안 의결



4월 15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국회는 4월 15일 본회의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검법)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특검법 의결 직후 “지금 방청석에는 이예람 중사 부친 및 관계자분들께서 방청하고 계신다. 조금 전 방청석에 가서 위로의 말씀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 법의 통과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본회의장 4층 방청석에서 특검법 통과 장면을 지켜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

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 밖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을 반영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범위를 확대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을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공연의 영상화’, ‘온라인 공연’ 등의 도입을 위해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



특집

우크라이나 사태,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폭등, 물가상승 압력과 국제공급망 붕괴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향후 결과와 상관없이 국제질서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대응방안 등을 각계 전문가로부터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 보호 힘써야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배경

정은숙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명예연구위원

‘사이버전’, ‘정보전’의 양상이 주는 의미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함의

조영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기동 북한연구학회 회장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 보호 힘써야



이광재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지난 50여 일, 세계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살해한다.”

스페인 내전을 겪고 헤밍웨이는 이렇게 썼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전쟁이 주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 어떤 전쟁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지난 4월 11일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주관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상 연설이 진행됐다. 전 세계에서 24번째다.

“모든 나라가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고, 모든 도시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 말이다. 초토화된 마리우폴 영상이 나간 후, 통역을 맡은 올레나 쉘겔 교수의 젓은 목소리에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전쟁 그 자체와 맞서 싸워야만 우리 인류는 다시 위대한 전진을 이룰 것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과감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익 보호에도 힘써야 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다음 날 전체회의를 소집해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내외 정세에 대한 현안 보고와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교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및 주변국 공관들과 긴밀히 상황을 공유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를 통해 기업들의 우크라이나 관련 우려사항을 기재부, 산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외교가



동시에 전개되어야 한다.

폴란드 난민수용시설 방문, 고려인협회 목소리 청취

지난 4월 8일 폴란드에 다녀왔다. 현지 난민수용시설과 난민등록시설을 방문하고 고려인협회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현지 자원봉사 중인 NGO 단체들과 긴급구호활동을 펼치는 세계식량계획 관계자들을 만났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는 폴란드 사회 분위기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우리에게는 남겨진 과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고려인 동포다. 고려인들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고 연해주에 모여 살았다. 72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포성 속 연해주에서 러시아 각지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낯선 땅에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삶을 가꾸어가던 소중한 우리 동포들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또 삶의 터전을 잃고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국인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고려인협회 회장님의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천여 명의 고려인들이 한국 입국을 희망하고 있다. 노인과 여성,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전쟁 중에 서류를 마련할 수 없어 비자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비행기 표 살 돈이 없는 분들도 많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사례처럼 정부가 군 전용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수천 명이 살고 있는 광주 고려인 마을을 비롯해 전국에는 고려인 마을이 존재한다. 고려인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가고 가족이 생이별의 아픔을 겪게 하며 삶의 터전과 가정을 산산조각 낸다. 이 비극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결국 인간의 몫이며 오롯이 인간의 책무다. 지금 우리의 인류애가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다시, 분단 한반도를 생각하게 된다. 안보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진다. 균형 잡히고 전략적인 외교로 안보와 평화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역사를 통해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트루먼은 스탈린을 설득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이끌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는 유럽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 되었다. 케네디 대통령은 피그만 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가졌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극복했다.

아울러 강력한 안보는 평화의 기초를 이룬다. 이스라엘은 확고한 국방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수호하고 있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는 누구보다 철저한 군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강력한 군사력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지금은 세계 질서의 재편기다. 무엇보다 국력이 중요한 때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한,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의 말이 절실한 시기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도 경제외교,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머나먼 타국의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리 교민의 안전, 나아가 경제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한다. 🍀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배경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이 서부 접경국(1,944km 접경)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침공을 개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유럽 내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한 최대 재래식 전쟁인 것이다.

4월 12일 기준, 최소 4천450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유럽 내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가장 큰 난민위기가 초래됐다(국외 470만 명, 국내 1천만 명). 우크라이나는 인구(4천400만 명), 영토(한반도 3배)로 봐도 소련공화국 중 러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크고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대통령의 말처럼 키이우 정부의 친서방 정책과 NATO의 동진 때문인지, 이것들이 진정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인지, 진정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반군 돈바스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제노사이드(집단학살)’의 희생자들인지 혹은 핑계인지, 사실은 미·러 냉전 부활 조짐 속 소련 상실에 대한 크렘린의 세력권 야심은 아닌지, 아니면 권좌 22년차인 절대 권력자 푸틴 대통령 개인이 우크라이나 내 안정적 민주주의의 체제 확립을 저지하려는 것인지, 다양한 분석이 분분하다. 중요한 점은 국제적으로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규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과 배경을 양국 간 오래된, 그리고 근래의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역사에 대한 이질적 관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인종, 역사, 문화적 유사성이 높다. 공히 10~11세기 유럽 최초 동슬라브 국가 ‘키예프 루스’를 모태로 그리스 정교를 수용한 점과 18세기 말 우크라이나가 차르러시아에 흡수돼 1917년 10월혁명 후 소연방 구성체였던 점이 그렇다. 최근 푸틴 대통령의 개헌연설에 따르면 바로 그런 유산들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결코 러시아와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되며, 이는 잘못된 민족주의, 신나치주의라는 것이다.



정은숙 명예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반면 우크라이나인들의 관점은 정반대다. ‘키이우 루스’ 시절에도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다른 고유의 민족정체성이 있었으며 공국 경쟁시절 자국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 서쪽 이웃들과의 통합을 경험한 점, 오히려 동쪽 러시아인들로부터는 역사 속(러시아공국, 차르 러시아, 소련) 강제와 통제를 받아 온 점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1991년 소련 붕괴는 마침내 수세기 동안의 러시아 통제를 벗어나 명실공히 유럽의 주권국가가 될 기회였다.

친서방 우크라이나의 뿌리깊은 대러 반감

둘째, 독립 후 지난 30년간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영토 남부와 동부 러시아계(전체 인구의 17%), 이들을 기반으로 한 크렘린의 개입으로 인해 친러 및 친서방 엘리트간 반목으로 점철돼 왔다. 2000년 푸틴 대통령 집권 후 더욱 그러했다. 마침내 2014년 러시아의 크림합병 및 이후 8년 돈바스 반군지원은 유럽 내 크렘린이 거리낌 없이 주권국 영토 전일성을 훼손한 획기적 사건이 됐다.

주지하다시피 2013년 11월, 동부 출신 친러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 EU와의 협력합의를 철회했다. 이는 유로마이단 반대시위를 불러왔고, 유혈진압으로 이어졌다. 그는 2014년 2월말 의회에 의해 탄핵, 러시아로 도피했다. 친서방 우크라이나인들의 뿌리 깊은 대러 반감이 표출된 것이다.

크렘린은 키이우의 혼란을 틈타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크림을 합병하고 돈바스 반군을 지원했다. 2014년 6월 대선에서 승리한 친서방 포로셴코 정부는 취임

부터 친러반군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의 내전에서 1만4천 명 이상이 희생됐으며, 민스크 협정(2015)에도 불구하고 교전이 지속돼 왔다. 내전 중인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것은 조건상 어렵게 됐다. 2019년 대선에서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2년 동맹국 없이 전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푸틴 대통령은 2월 24일 대국민 연설에서 자신이 3일 전 돈바스 2개 공화국(도네츠크, 루한스크)의 독립을 승인했으며 이들로부터 ‘제노사이드’에서 구조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나름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방편으로 보인다. 그는 러시아군의 ‘특별군사작전’ 목적이 키이우 정부의 ‘탈군사화’, ‘탈나치화’, ‘관련자 처벌’이라 했다. 그렇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 민군의 반러 저항력과 투쟁의지가 2014년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다. 국제적 지원도 그렇다.

키이우에 친러정권 세우려 하나

마지막으로, 강대국과의 관계와 국제질서 측면이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NATO 회원국은 아니지만 친서방 성향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써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동맹중시 정책’, ‘민주주의 연대’를 시험하고 자국 세력권을 확실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키이우에 친러정권을 수립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영토통합성 존중은 국제사회의 기본규범이다. 유엔 긴급특별총회는 3월 2일 대러 규탄 및 철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주요국들은 초유의 대러제재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휴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

‘사이버전’, ‘정보전’의 양상이 주는 의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군사적 침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양국 간의 분쟁을 넘어서는 국제정치의 다층적 대립구도를 바탕으로 깔고 발생했다.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개전의 빌미가 됐다. 서방의 나토 진영이 동진을 계속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유럽 안보질서 재편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좀 더 넓게 보면, 전쟁의 이면에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려는 ‘규칙 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해서, ‘자원권력’의 게임을 앞세워 자국의 영향권을 수성하려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정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전차부대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진격한 재래식 영토전쟁의 성격을 갖는다.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흑해 일대를 봉쇄하는 재래식 전쟁의 양상이다, 러시아가 경보 상태를 높여 핵전력 태세를 강화하면서 핵전쟁의 요소도 가미됐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푸틴에 대한 직접 제재와 하이테크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 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과 같은 경제 제재에 이어 스위프트(SWIFT)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결정에 이르기까지 비군사적 공세의 수위도 높여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태까지 주로 개념적으로 논의되던 ‘미래전(future warfare)’의 양상을 실제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쟁의 수단 및 수행방식이 변화하는 사이버전과 정보전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전쟁의 주체라는 점에서도, 과거처럼 군복을 입은 정규군 위주로만 작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해커 집단과 민간 기업, 일반 시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전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게다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가사회를 교란하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정치적 우위



김상배 교수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를 달성하는 심리전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미래전의 양상은 몇 가지 점에서 한국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사이버전과 물리전의 시너지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전 직전까지 감행되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 전차의 진격과 함께 자취를 감추는 양상을 보였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스페이스-X’와 같은 서방의 빅테크 기업들이나 해티비스트 그룹인 ‘어나니머스’ 같은 초국적 민간 행위자들의 활동이 시선을 끌었다. 오프라인에서 전개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온라인상에서 양국의 해커 조직은 물론 다양한 국가의 해커들과 보안전문가들, 해티비스트 그룹과 사이버 범죄 조직까지 대거 참전하는 ‘사이버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흥미로운 양상이 펼쳐졌다.

최첨단 활용 정보전, ‘오픈소스 정보’ 시대 도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전의 양상도 나타났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무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자율주행 드론인 터키제 ‘바이라타르 TB2’나 ‘자살 드론’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란셋(Lantset)’이 사용됐다. 휴대용 대(對)전차 미사일인 재블린이 야간투시경과 결합해 그 위력을 발휘했으며,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정보전 분야에서도 민간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특히 구글맵이나 민간 인공위성 업체들이 제공하는 영상 정보들이 SNS에 올라와 전쟁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하면서, ‘오픈소스 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케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SNS를 활용한 심리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러시아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전전을 수행했다. 우크라이나도 미디어로 현지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며 맞섰다. 특히 SNS를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여론전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전쟁에서 누구보다 SNS 활용을 주도한 인물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SNS에 올라온 영상이나 사진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의 가짜뉴스 전파에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서방 플랫폼 기업들의 동참도 큰 변수가 됐다.

한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견국’ 인식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크라이나가 당면했던 전략적 선택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안보에 주는 함의가 큰 사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국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견국’이라는 변수도 인식하게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에 매우 큰 군사적 함의도 던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재래식 전쟁의 모습과 더불어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미래전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화하고 있는 미래전의 현주소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여전히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 🍵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함의



조영관 선임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2년 2월 말에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각종 무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해서는 경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EU 등 서방은 2014년 3월에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에 다수의 제재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이후 시행된 제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제재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전 시기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의 특정 부문에 타격을 가하는 낮은 단계의 제재였던 반면, 2022년의 제재는 러시아 경제와 세계 경제를 단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4~2021년 동안의 제재도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014~2021년까지 러시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9%로 전세계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인 2.9%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제재 대상 부문을 제외한 영역에서 러시아의 대외경제협력은 지속됐으며, 서방 기업들의 대러 투자도 지속됐다.

세계경제와 단절시킬 만한 강력한 제재

그러나 2022년 2월 이후 시행된 제재는 범위와 규모에 있어서 이전 제재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첫째, 교역에서 서방은 반도체를 포함한 7개 첨단 분야 품목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을 통제했다. 또한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폐지함으로써 향후 자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둘째, 금융 부문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환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고,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를 비롯한 주요 은행에 거래 중단 등의 제재를 취하고 있다. 또한 주요 러시아 은행들을 대상으로 스위프트(SWIFT) 제재를 시행해,



이 은행들을 이용한 국제 교역대금 결제와 송금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 수출의 50~60%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에 대한 제재의 시행이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로 평가되는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시행하거나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넷째,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두 명의 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시행했다.

이처럼 2022년 2월 이후 시행된 서방의 일련의 제재는 이전에 시행된 제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수준이다. 제재 시행 이후 ‘맥도날드’를 비롯한 400여 개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철수했으며, 러시아 산업계와 국민들은 제재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

대러 교역 감소 및 현지 진출 기업에 차질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이후에 전개된 러시아의 대응 제재, 서방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철수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4년에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22년에는 대러 수출 제한이나, 스위프트(SWIFT) 제재, 금융기관 제재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으며, 이제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제재를 취하고 있다. 당분간 양국 정부 간의 협력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또한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교역의 영향이다. 러시아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주요 수입품인 에너지 등의 교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은 일부 광물, 희귀가스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영향이다. 세계 물류 기업들의 서비스 중단으로 현지 공장에 대한 부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하락했다. 당분간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으며,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 발생도 예상된다.

셋째, 금융이나 물류 등 서비스 부문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러시아와의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러시아 물류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 조선업이나 건설업 부문의 협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휴전이 선포되고, 서방과 러시아 간에도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 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 제품의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했던 한국 기업들의 계획에 차질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러시아와 에너지 운송망을 연결해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철도망을 연결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러 정치, 경제협력이 소원해지는 이 시기에도 국내에서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향후 언젠가는 재개될 러시아와의 협력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던 ‘지정학의 귀환’이라는 국제정치 담론이 회자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팽창에 대응하여 안전보장을 유지하고 유라시아 지역에서 경제·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현실주의가 충돌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지금 한반도에서도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의 귀환’이 불러올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한반도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강대국 사이에 끼인 국가로서 지정학적 불리함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사회의 정 의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줄곧 미국과 서방의 패권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의 철군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불의한 전쟁’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주권의 존중과 수호를 그토록 중시해온 북한이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든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유사성과 북한의 국익중심적 태도를 감안할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첫째, 북한은 탈냉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핵포기와 강대국들의 안전보장 약속에 대한 믿음이 초래한 작금의 우크라이나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핵보유 의지를 키우고 핵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과 국방력 강화로 한국의 안보위협이 증대하고 안보딜레마가 심화될 수



이기동 회장
북한연구학회

록 이른바 ‘3축 체계’와 같은 북핵 대응역량을 신속히 구축하는 한편, 군비를 계속 증강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여느때처럼 적대정책 철회와 이종기준 철폐를 주장하면서 9·19남북군사합의서 파기로 맞설 것이다.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셋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각자도생의 시대가 얼마가지 못하고 진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고사하고 규탄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이 구조화되면, 이러한 구조에 갇힌 남북관계 발전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넷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2019년 12월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고 8차 당대회에서 재확인한 ‘정면돌파전’ 노선을 강화할 것이다. 정면돌파전이 지닌 대외 담론의 핵심은 “외부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버리고 자체의 힘을 강화해 난관을 돌파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대외·대남 고립주의적 장기전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전을 벌일 수 있는 만큼의 내적동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는 의미를 담아 ‘우리국가제일주의’ 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북중국경 봉쇄 속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의 힘만으로 삼중고를 견디었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반영하는 담론이다. 한국과 미국이 ‘적대시정책 철회’와 같은 자신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 ‘우리국가제일주의’ 안에 담겨 있다. 남북관계의 전망을 어

둑게 하는 요인이다.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관리해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북한이 핵능력을 꾸준히 강화할지라도 비핵화 궤도에서 완전히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응당한 벌칙을 부과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관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유엔과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책임있는 회원국들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기존 비핵화 원칙과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대응해 억지력을 확보하고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능력에 대한 북한의 오판을 막고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완화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조화’를 경계해야 한다. 휴전선이 남북한 간의 최전방을 넘어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지정학적 현실주의가 부딪치는 최전방이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복합적인 위기가 다가올수록 그 어느때보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입장이 분절화된 한국의 정치환경에서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자체가 희망적 사고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의 기류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정책을 당쟁과 정파적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박재호 간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남구을)



“박람회 유치 성공으로 대한민국 위상 전 세계에 알릴 것”

Q.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개와 함께 여당 간사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이 향후 20년 내에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경제적·문화적·외교적으로 영향력이 큰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이 유치하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 월드컵, 세계박람회를 모두 개최한 7번째 나라가 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부산은 유치 장소일 뿐입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제, 문화, 기술적 발전을 홍보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행사입니다.

이런 막중한 국가사명을 돕는 국회 특위의 간사를 맡

게 되어 영광입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큰 도약을 이끌 동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Q.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의 역할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그동안 선거 때문에 국회 특위가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회 차원의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할 수 있는 일,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저는 국회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의 역할에서 세계박람회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조금만



하고, 유치위원회와 산자부 등의 부처가 제대로 유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돕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내년 말에 유치지 결정이 이뤄집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후보도시 자격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3개국이 경쟁해야 하는데요. 어느 한 곳도 만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치위, 주무부처, 부산시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해야 하고, 특히 국회 특위가 제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되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남부권이라는 새로운 균형 축을 시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폭제 역할을 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와 촉매 역할도 가능합니다. 범국가적인 유치운동의 중심에 국회특위가 제대로 한몫을 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A.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국민 모두가 유치 일꾼이 되어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BIE(세계박람회기구)의 170개 회원국 정부가 투표의 주체입니다.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해외동포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박람회의 개최 이유와 효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세계박람회가 어떤 행사인지, 왜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턱 없이 부족합니다. 단적으로, 유치도시인 부산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치 추진 사실을 안다는 분이 55%, 모른다는 분이 45%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세계박람회에 대해 유치도시인 부산시민들조차 절반 정도만 아는 것은 국가적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내로 박람회의 유래와 유치 효과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홍보와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2030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세계박람회가 과거 치렀던 대전과 여수박람회와 같은 행사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대전과 여수에서 개최한 박람회는 전문(인정)박람회이고, 2030년 유치하는 박람회는 세계(등록)박람회로 행사 규모, 기간, 행사, 유치 효과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유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등록)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까지 세계박람회에 대해서 해박한 유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유치운동, 현장 실사, 경쟁PT 등에서 국민의 유치 열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Q. 마지막으로 상대 간사위원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안병길 간사님은 부산지역 유력 신문사 사장까지 역임하신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이셔서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추셨고 인맥도 넓으십니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장소는 부산 북항 일원인데, 안병길 간사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셔야 할 분이시죠. 그래서 박람회 유치를 위해 중형무진 활동하고 계십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안병길 간사님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유유키



안병길 간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서구동구)

“의원외교 활성화와 법제도, 예산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

Q.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개와 함께 야당 간사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A.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세계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등록박람회’입니다. BIE가 공인하는 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인정박람회’ 두 가지인데, 지난 1993년 대전, 2012년 여수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인정박람회였습니다. 개최 기간, 전시장 면적 등이 등록박람회에 비해 제한이 많습니다. 5년 주기로 개최되는 등록박람회는 개최기간만 6개월에 달합니다. 전시 면적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부산항 북항 일대 약 344만㎡의 부지에서 개최되는 초대형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유치조직 체계가 반드시 구

성되어야 합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역시 민간유치위, 정부지원위원회, 부산시 추진단과 함께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지난 2월 본격 출범했습니다.

우리 특위에는 부울경 출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 대구를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부산이 아닌 대한민국의 박람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부처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의 역할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을 휩쓴 데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특위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지난 4월 13일 국회에서 박람회 업무 관련 8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향후 국회 특위 활동 계획은 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 내 박람회TF 활동성과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박람회 TF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TF에서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민간유치위원회와 정부지원 위원회로 이원화된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개편해나가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으로 정리되면 강력한 유치체계가 구성되는 만큼 국회에서는 의원의외교를 통한 교섭활동에 본격적인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Q. 올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안이나 과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A. 현재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내년 11월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모스크바), 우크라이나(오데사),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등 저마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최근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경쟁이 어렵다고 하나, 남은 두 국가 역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전방위적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차별점이 부각되도록 PT전략과 유치계획서가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프라 조성 역시 소홀할 수 없습니다. 박람회장 부지조성을 위해서는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55보급창 및 부

두 이전을 위한 예타 조사 과정 등 유관 절차 역시 빠르게 완결되어야 합니다. 해외 및 국내 어디서든 부산에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항공·해상·육로 등 다양한 교통수단 마련도 필수과제입니다.

작년 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사후 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는 등 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윈스톱 프로세스를 담아냈습니다.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 역시 시급합니다. 박람회 관련 시설 관련 계획은 단기간에 수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이 통과되고 세부법령과 시행지침까지 마련되려면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야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상대 간사위원님께 칭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박재호 의원님께서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부산에 대한 애정도 어느 누구보다 크신 분이고, 무엇보다 한다면 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분이시라는 것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2030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함께 이끌어 낼 파트너로 박재호 의원님이 적격입니다. 다양한 상임위에서 쟁아 오신 박재호 간사님의 풍부한 경험을 잘 배워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도 수월하게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자연과 문화,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 준비하는 경남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긴 겨울 끝 새봄을 환영하듯 섬진강 벚꽃이 눈처럼 하얗게 천지를 물들이고 있었다. 색색의 꽃과 연둣빛 나무로 싱그러운 봄 향기가 완연한 경남 사천과 남해, 하동에서 하영제 의원과 함께 지역 여행을 시작했다.

고급 녹차 생산 중심지 하동

하영제 의원이 제일 먼저 취재진을 안내한 곳은 이제 막 푸른 잎을 내기 시작한 하동의 녹차밭이었다.

“1천200년의 역사를 가진 하동녹차는 예로부터 왕에게 진상되어 ‘왕의 녹차’라 불렸습니다. 섬진강과 그 지류인 화개천에 인접한 차 재배지는 안개가 많고, 다습하며, 밤낮의 기온차가 커 차 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녹차는 타 지역 녹차보다 성분

과 맛, 품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뒹임’ 기술을 활용해 고급 녹차를 생산하고 있어 보급형 녹차를 생산하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녹차 재배 면적은 전국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하동군 화개면은 2006년 ‘녹차 산업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내년 5월에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라는 주제로 ‘2023 세계 차(茶)엑스포’가 하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엑스포를 통해 뛰어난 하동 녹차의 우수성



남해 다랭이 마을에서

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차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는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동군민과 한마음으로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하동군 일대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수해를 입었다.

“당시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로서 원인을 분석해보니 댐의 사전방류 미실시와 일시 과다방류 등 관재(官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이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도 하지 않았고, 홍

수 조절지(調節池)도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추구하고 다양한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착공으로 지역발전 새 이정표 기대

다랭이 마을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많은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하동 녹차밭에서

산골짜기의 비탈진 곳에 있는 계단식의 좁고 긴 논을 ‘다랭이’라고 부르는데 ‘다랭이’는 다랑이의 남해 지역 방언이다. 45도 경사 비탈에 108개 층층 계단, 680여 개의 논이 펼쳐져 있으며, 3평밖에 안 되는 작은 논부터 300평짜리 논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오리와 우렁이 등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고수하는 다랭이 마을은 활짝 핀 벼꽃과 유채꽃이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절경을 뽐내고 있었다.

“남해는 지금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23년간의 도전 끝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영제 의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도모하는 상징이자, 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L’자형으로 이어진 국토 77호선 897km 구간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을 연결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설명하며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전남 동부권의 연간 4천만 관광객과 경남 서부권의 3천만 관광객이 동서로 오갈 수 있게 돼 관광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 사천

삼천포대교를 건너 사천으로 들어선 하영제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산업이자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이 사천”이라고 소개하며 일행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으로 안내했다.

“1999년 설립된 KAI는 국내 대표 방위산업체로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 MRO(Maintenance·정비, Repair·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영제 의원(오른쪽)



사천 삼천포대교

수리, Overhaul·정밀검사) 등 항공우주 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개발 및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7개국에 국산 항공기를 수출하면서 항공기 수출산업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영제 의원은 “사천에는 약 3천 명에 이르는 기술연구 인력을 보유한 KAI와 KAI 우주센터가 있고, 경남 항공국가산단, 항공 MRO 일반산단 등 국내 항공산업의 70% 이상이 밀집한 항공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다”며 “우주산업 시대를 선도해 나갈 연구 생산 인프라를 이미 구축하고 있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유치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했다.

“사천·남해·하동,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킬 것”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하영제 의원은 청와대 및 행정자치부 근무, 거창군수와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물식품부 제2차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며 일반 행정과 농수산 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사천·남해·하동은 전국에서 내로라 할 농업 및 수산업 지역 중 하나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소멸 위험지역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농어촌 지역과 관계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곳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수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을 살려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영제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 동안 지속될 이 위원회에서 소임을 다해 지자체들의 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인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을 해소해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를 마음에 새겨 국정을 감시하고, 지역의 살림을 살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천·남해·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제 의정활동의 목표입니다.” 🏠

경남 사천·남해·하동: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역지사지(易地思之)

경청하고 소통하는 정치의 기본

조오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재선의 광주광역시 시
의원으로 활동한 조오섭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역지사
지(易地思之)’다.

“갈등이 발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상대방 입
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역지사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되더군요. 그런 자세로 살아
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지사지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
었습니다. 저희 집 가훈도 제가 ‘역지사지’로 정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평범한 학생이었다는 조오섭 의원은
1986년 전남대에 입학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광주학살의 책임자인 전두환 정권 시절이라 강의실
에 앉아 공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자가 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했지만 공부 대신 학생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내성적이었던 조오섭 의원은 학생운동을 하면서 성

격도 많이 바뀌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 앞에서 학생운동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적극적이
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4학년 때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맡게 됐는데 학생들을 챙기고 학
생회 사업을 총괄하는 일이 제 성격과 잘 맞았습니다. 사
람을 챙기고 관계를 맺는 일을 그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으로 제적을 당한 조오섭 의원은 주물공장
에 위장 취업해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일이었는데 육체적으로도 힘
들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 컸습니다. 혼자 힘으
로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니 그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
이 안 되더군요. 고민 끝에 노동운동을 접고 자영업에 뛰
어들어 7년 넘게 자영업을 했습니다.”

노동운동은 그만두었지만 학생운동 때부터 알고 지



내던 친구들과 모임도 꾸준히 하고 시민단체 활동도 계속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오섭 의원은 강기정 전(前) 의원의 권유로 시의원에 출마하게 됐다.

“사람들은 정치를 혐오하고 멀리하고 싶어 하지만 실은 우리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정치는 학생운동이나 시민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가장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여러 현안들을 역지사지의 자세로 해결할 수 있었다.

“정치라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인데, 갈등해소의 가장 좋은 방법이 역지사지였습니다. 민원인 간의 갈등이나 현안에 대한 갈등도 그렇게 풀어나갔습니다. 역지사지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경청하다 보니 소통이 되더군요. ‘역지사지’는 경청과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고 덕분에 합리적인 의원이라는 평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합리적 견제로 국민의 삶의 질 높이는 정치할 것”

국회 입성 후 조오섭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사태에 따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했고, 3법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그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임산부들이 보호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법으로 발의했다. 조오섭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정립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갈등

을 겪고 있는 임산부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심리 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꼽았다.

“광주와 대구 사이 203.7km 구간을 고속화 철도를 통해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10여 년 넘게 계속 예비사업으로 남아 있던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이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과 합동기자회견을 하고 2~3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힘을 쏟았습니다. 혼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쁩니다.”

이밖에도 낙후된 광주역과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혁신지구 지정, 그린스타트업타운 선정, 전남대 캠퍼스혁신타운 선정,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전적격심사 통과 등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유치한 그는 “광주역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들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반대가 아닌 합리적 견제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치개혁도 고민하면서 남아 있는 지역 현안들을 잘 챙길 것”이라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제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글 김현아 사진 김진원

“현장의 목소리 담겨 있는 정치를 하겠다”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박완수 의원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국회보 5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임호선 의원이다. 그를 추천한 박완수 의원은 “항상 차분하고 넉넉한 인품으로 많은 분들과 두루 잘 지내지만, 정부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도 마다하지 않는 합리적인 정치인”이라 소개했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박완수 의원님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늘 신중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간사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배울 점이 많은 선배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지목해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교통국장,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내며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활동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던 그는 제21대국회에서 고향인 충북에서 첫 배지를 달았다. 임 의원은 경찰 생활을 하며 느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2년 발생한 오원춘 사건을 아실 겁니다. 당시 경



찰은 통신영장을 받지 못해 결국 제시간에 맞춰 피해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쇄신기획단’ 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범죄신고자 위치 추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왜 조금 더 일찍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겠다는 결심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지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할 때 보람 느껴

임호선 의원은 취재진에게 “최근 실종 아동이나 치매 노인을 찾는다는 문자를 종종 받지 않으셨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작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실종문자 발송 실수로 실종자 발견 평균 시간이 10배 이상 빨라졌다고 해요. 실종문자 서비스의 높은 성과 덕에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임 의원은 “30년 넘는 경찰 근무 경험 때문인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을 하나씩 해결할 때마다 ‘정치 하길 잘했구나’하고 느낀다”며 웃었다.

임호선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안전 뿐만 아니라 제복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이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데이트·아동·학교폭력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조두순과 같은 신상공개 강력범의 개명을 금지하는 법안 등 시민의 생활안전 인프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현장을 누비는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도 크게 개선시키고자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법’이 통과되어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가 진행 중입니다. 국립소방병원은 화상·트라우마 등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에 특화된 전문의료기관으로, 대학병원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진천·음성·증평 군민들의 종합병원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임 의원은 지역 현안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충북 혁신도시는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이 많으면서 현재 6월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문제, 우체국 이용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중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으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인은 항상 현장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제복을 내려놓고 정치인이 되었지만, 제게 주어진 임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대한민국의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영 의원을 칭찬합니다

“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은 초당적인 협력과 소통을 갖춘 충북의 든든한 선배님입니다. 최근 100억 원 규모의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충북에 유치하는 등 지역사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글 윤성혜 사진 유윤기

“개혁과 민생이라는 과제에 온 힘 쏟겠다”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구성동구을)

아나운서 출신으로 제21대국회 집권 여당의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당과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 박성준 의원. 그는 시골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TV와 신문, 선거 벽보 등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박 의원은 충남 금산 태생으로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충남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를 마치고 KBS 대전방송총국 아나운서, JTBC 아나운서팀 팀장으로 일하다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신뢰감을 주는 스피치로 정평이 난 그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봤다.

TV 보며 정치인의 꿈 품은 소년

밝고 쾌활한 성격에 리더십도 있어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다는 그는 어렸을 적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금산에서 초·중학교를 다니고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그는 “어린 시절, TV에 나오는 정치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가 하면 선거철 유세 벽보를 한참동안 읽곤 했다. 정치인들이 살아온 길,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등 이력을 전부 기억했다. 당시 장래희망은 정치인 아니면 사업가였다”

고 회상했다.

중학생 때 부친이 작고해 가정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정치의 꿈을 품고 착실하게 공부했던 모범생이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됐고, 정치를 더 잘 알고 싶어 석·박사학위까지 취득했다. 동경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그는 김대중,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두 분은 각각 민주주의와 산업화 측면에서 배우고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관심이 많은데 정도전과 태종 이방원을 꼽고 싶습니다. 제왕과 책사의 조화, 조합이 역사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창업과 수성의 리더십, 국가통치술 등이 중요하고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졌던 권력의 승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널리즘의 현장인 방송을 누비며 현실과 이론을 접목하게 된 그는 평소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며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는 열망을 품었다. 그는 2019년 12월 정치권의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선 당선을 낙관하기 어려웠던 서울 중구성동구를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

“30여 년 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잠시 현재 제 지역구에 있는 남산 인근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남산에 자주 올라가 서울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남산과 매봉산 둘레길을 탐나는 대로 걷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 지역구와 맺어진 인연이 지금의 제 정치적 운명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재양성과 국가 R&D에 힘써야

박 의원은 국회에 들어와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반도 안보와 검찰개혁 등 큰 주제를 깊게 다뤘

다.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등 국가 차원의 대책도 마련했다”며 “모든 사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하고 우리 앞에 직면한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더 자주 만나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바퀴를 밀고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민 주거 확충을 위해 공공임대 매입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방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안등을 대표발의했고, 최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범죄가 현행법에서 규정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대변인 등을 지내며 점점 더 정치에 눈이 트이고 있다는 박 의원은 앞으로 해야 할 정치에 대해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패와 불평등을 제도개선으로 해결하고, 인재양성과 국가 R&D(연구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입법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권력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도심 재개발과 교육, 소상공인 등 세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중구와 성동구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

글 김영선 사진 김진원



국회, 본회의 열어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공직선거법’ 등 의결

국회는 4월 5일 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안 10건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으며,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어 국회는 4월 15일 제39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1년 발생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폭력과 성폭력 은폐에 대한 범죄는 군 지휘 체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법률안은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19년, 2020년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및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가진 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종전 주민투표청구에 참여할 때 자필 서명만 인정돼 대면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을 개선해, 전자서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했다.

또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이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에서 과반수로 득표한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됐으나, 이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된다.

아울러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인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았던 주민투표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됐다.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자치분권 확대로 지방의 인구·지리·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의 기능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별사무로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됐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지원 등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제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목적인 건전한 민간단체의 육성과 발전이 한층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생치안을 위한 자율방범대(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는 전국 약 10만442명, 4천225개 조직으로 구성(2021년 10월 기준)돼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범죄 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자율방범대가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자동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장착·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법적 근거도 신설해, 소방자동차 운행 기록과 운전자 행동 등의 데이터 분석으로 소방자동차가 출동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현행법상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개정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11개 선거구에 한정, 1개의 선거구당 기초의회 의원을 3~5명으로 확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4명 이상 선출 선거구의 분할 가능 규정도 삭제했다.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될 경우 사표(死票)가 방지되고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제도상의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상하 3대 1로 변경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8.6.28. 2014헌마166) 등을 고려해, 광역의회의원 총

정수는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39명 증원하고, 기초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927명에서 2천978명으로 51명 증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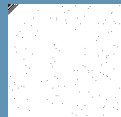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 지역(전국 11개 선거구)

서울(4)	서울특별시서초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를 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성북구갑국회의원선거구, 서울특별시강서구을국회의원선거구
경기(3)	경기도용인시정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남양주시병국회의원선거구, 경기도구리시국회의원선거구
인천(1)	인천광역시동구미추출구갑국회의원선거구
영남(1)	대구광역시수성구를 국회의원선거구
호남(1)	광주광역시광산구를 국회의원선거구
충청(1)	충청남도논산시계룡시금산군국회의원선거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골프 인구의 증가와 골프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중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이용료 인상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일률적인 현행 회원제/대중 골프장의 분류체계를 재검토하고 골프대중화에 부합하는 골프장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용가격 등의 분류기준 및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됐다.

개정안은 골프장업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새롭게 구분했다. 골프장업을 1차적으로 ‘회원 모집 여부’를 통해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하고,



2차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캐디·카트 선택 가능 여부 등 골프 대중화 요건에 기여하는 골프장의 경우 대중형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상대적 세제혜택 외 체육 기금 용자 우대(금액, 기간)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의 분리 운영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리적 가격의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공연이 아닌 ‘온라인 공연’과 ‘공연의 영상화’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대규모 공연장 무대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 연기의 관람석 확산 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방화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공연예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공연장의 규모·형태·구조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의 무대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해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면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 지원과 새로운 기술에 따른 공연 관람 방식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해 공연장 무대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 위험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유기 및 맹견안전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되고, 반려동물가구의 급증 등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동물보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해,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해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폐업 시 발생하고 있는 동물 유기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맹견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들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다.

이 외에도 비영리 목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의무와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이고 건전한 동물 보호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군인사법’ 개정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사망하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로 구분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 과정에서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내 사망자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구분하는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해당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족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로 인해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하기는 해도 입증하기가 어려워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해당 유해는 미인수 영현으로 전환되어 유족의 고통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으로 인정하려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1일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7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국방위원회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개정법률은 원칙적으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법률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순직 여부를 심사 중이거나 심사 예정인 사망 군인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개정법률의 심사 과정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크다는 공감대 하에 세부적인 법률의 내용과 부칙의 적용례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법률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찰 등 일반공무원의 경우 순직 여부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순직을 결정하므로, 강제 징집되어 근무하는 병(兵)과 달리 장교와 부사관과 같은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직위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장교 등과 병을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의무복무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순직 인정의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했다.

개정법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군 병영문화가 개선되기 이전인 2015년 이전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93.7%에 달하는 순직률이 나오고 있으며, 의무복무하는 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개정법률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창군 이후 군에서 사망한 인원 중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총 3만8천9명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사망 관련 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해 관련 기록이 없는 사망자는 사건 기록의 부존재로 일괄 순직 처리되어야 하는 반면,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사망자는 재조사 및 심사를 통해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순직 인정에 따라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개정법률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

개정법률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의무복무 과정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유족의 고통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개정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군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해 순직이 폭넓게 적용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도록 군인의 사망 관련 절차 및 과정을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영국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에 관한 법률 개정 사례

영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The King reigns but does not rule)’라는 말로 대표되는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 아래 성문헌법 대신 불문법(Common Law)을 법치의 근간으로 한다. 특히, 의원내각제(또는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어 총선 결과 의회 내 다수당이 되는 정당이 국왕으로부터 내각 구성권을 일임 받아 총리 이하 정부를 구성한다.

정권을 잡은 정당은 총선 때의 공약을 토대로 국정을 운영하나,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국정운영의 동력을 쇄신할 수 있다. 물론,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a vote of no confidence)이 가결되는 경우에도 새로 총선을 실시하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와 대선, 국회의원의 임기와 총선 등 모든 선출직 대표의 임기와 선거시기가 정해져 있는 우리의 정치체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보통 위와 같이 알고 있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운영방식은 사실 2011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전통적으로 국왕의 특권(The Royal Prerogative)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문법에 해당하던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에 관한 국왕의 권한을 의회로 넘긴 것이다. 즉, 집권당 총리의 요청으로 국왕이 결정하던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 여부를 의회, 특히 하원의 의결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바로 ‘2011년 의회고정임기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이다.¹⁾ 그런데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 남짓된 2022년 영국 의회는 여야 합의로 이 법률을 폐지하고 다시 예전 방식으



임종수
국회 영국 주재관

1) 이하 ‘의회고정임기법’이라 한다.

로 환원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2022년 3월 24일 최종 의결된 ‘2022년 의회 해산 및 소집법(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Act 2022)’이다.

의회고정임기법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2011년 이전까지는 의회 해산²⁾과 조기 총선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과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집권당과 정부는 정치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의회를 해산할 수 있었고, 새로운 총선 실시 시기도 정할 수 있었다. 물론 여소야대(a hung parliament)인 상황에서는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가결해 총선이 실시되기도 했다. 영국은 1911년 이래 법적으로 하원의 임기는 최대 5년이었으나, 1945년 이후 치른 21번의 총선에서 평균 의회 지속기간은 3.7년에 불과했다. 잦은 총선과 짧은 의회 임기로 인해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된다는 지적과 개선 논의도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조기 총선 실시 여부와 실시 시기를 집권당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집권당에 유리한 상황과 시기에 총선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이었다.

2010년 총선에서 자유민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한 보수당은 자유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0년 7월 의회고정임기법안을 제출했고, 해당 법안은 2011년 9월 최종 의결됐다. 의회고정임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선 실시일 법정화: 직전 총선일 이후 5년이 되는 해 5월 첫째 주 목요일
- 조기 총선 실시 조건 법정화
 -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434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 하원에서 정부 불신임 동의가 의결된 이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 하원의 신임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하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 백년 동안 이어져 온 영국 정치체제의 근간을 변경하는 내용임에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엄격한 조기 총선 실시요건으로 인해 국민에 대한 의회의 책임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당시 연립내각 구성에 키를 쥐고 있던 자유민주당과의 협상 결과, 보수당 정부는 총리의 강력한 정치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법률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의회고정임기법 시행 경과와 폐지 논의

전격적인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의회고정임기법은 영국 정치체제에 제대로 안착되지 못했다. 당초 5년의 의회임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던 취지와는 달리 2015년 총선을 제외하고 2017년 및 2019년에 모두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서 법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 역사적으로 영국 의회는 국왕의 자문기구에서 출발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자 했던 국왕이 귀족과 영주들을 소집했던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후 국민을 대표해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현대의 의회로 발전하면서도 의회의 해산 및 소집 권한은 불문법상 국왕의 권한으로 유지되어 왔다. 다만, 현대에는 사실상 집권당 총리의 요청을 받은 국왕이 형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본격적인 브렉시트(Brexit) 협상을 앞두고 보다 안정적인 의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추진한 2017년 조기 총선은 야당인 노동당의 찬성으로 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 법적 절차에 따라 실시됐다. 하지만 2019년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제안한 조기 총선 동의안이 세 번이나 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의회고정임기법을 우회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실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2019년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는 보수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이 모두 의회고정임기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브렉시트 협상과정에서 초래된 의회 내 정치적 교착 상황이 의회고정임기법으로 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의회가 무기력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의회고정임기법 제정 당시 포함된 사후평가 규정에 따라 2020년 구성된 상하원 합동 평가위원회도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한 가중다수결(2/3 찬성) 원칙이 의회 교착을 초래할 수 있고, 2019년 총선 사례와 같이 일반 법률로 우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회고정임기법 폐지와 국왕의 특권 복원

2019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과반 의석을 달성한 보수당 정부는 2021년 5월 ‘의회 해산 및 소집 법안(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Bill)’을 제출했다. 법안의 내용은 단순했다. 의회고정임기법을 폐지하고, 의회 해산 및 조기총선 실시에 관한 국왕의 권한을 과거와 같이 회복하며, 이와 같은 국왕의 특권

행사는 법원의 심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국왕의 특권과 이에 대한 사법 심사 배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는 점에서 확인적 법률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의회고정임기법의 폐지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하원에서는 여야 간 이견 없이 의결됐다. 하지만 오히려 상원 심의과정에서 의회 해산을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하원의 동의가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는 수정안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하원이 그에 따른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원안 의결됐다.

지난 3월 24일 ‘2022년 의회 해산 및 소집법(Dissolution and Calling of Parliament Act 2022)’이 의결된 직후 영국 정부는 그동안의 검증과 테스트를 거쳐 선거 실시에 관한 전통적인 방식이 최종적으로 복원됐다고 발표했다. 시행 10년 만에 의회고정임기법이 폐지되면서 영국 정치체제의 커다란 변화를 위한 시도는 과거 제도로 회귀하는 것으로 종료된 것이다.

결국 영국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보다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성을 적시에 확보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 의회민주주의가 태동하고 많은 국가의 정치체제 형성에 모델이 되는 영국에서 의회 해산과 총선 실시에 관한 제도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된 논의와 경험은 다른 국가에게도 여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기후위기시대 산불 대응 전략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4월 1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받는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해 현재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강동욱 한국복지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개인예산제도 신청자격과 범위를 짚었다. 이어 김동홍 동문장애인복지관 지역권익팀장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2019~2021년) 결과를 발표했고,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회공공서비스 보장범위의 단계적 확대를 강조하며 각 지자체를 통한 서비스 급여 확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 세미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4월 4일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 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

최했다.

세미나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고 사회혁신 가치가 높은 주거공간 인프라의 효율적 조성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연숙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초저출산·초고령·저성장사회 주거복지 혁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박민용 협성대 총장을 좌장으로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회장, 권오정 한국주거학회 회장, 이제선 한국도시설계학회 회장 등이 주거복지를 위한 국토공간인프라 조성 방향과 미래의 인구구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기후 위기 시대, 새로운 산불 대응 전략’ 식목일 기념 긴급토론회

권성동·이철규·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이광재·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5일 ‘기후 위기 시대, 새로운 산불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식목일 기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강릉과 울진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의 원인이 기후 위기라고 언급하며 기후 위기와 함께 앞으로의 산불 대응 대책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수자원 관리 권위자인 슬로바키아 환경운동가 마이클 크라빅 박사가 ‘산불로 훼손된 생태계 치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산림생태계에서 물 보유능력을 높여 자연적으로 산불 방어 능력을 높였던 지난 유럽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한무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교수가 산불 대응 대책과 생태계 치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우수영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산불피해지역 시민과 환경운동가, 지자체와 소방청, 산림청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축을 공학이나 기술을 넘어 ‘예술’로 규정하고, 지난 2월 발의된 ‘건축예술진흥법’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본격적인 법안 검토와 토의에 앞서 다양한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제도가 문화예술로서 건축을 육성하고 건축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며, 문화예술로서의 건축물을 지원하는 법제도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황승홍 국민대 법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법안의 제정 취지,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윤

정현 한국건축가협회 법제위원장, 한영근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이 법안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권연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과 서영주 건축가협회 부회장이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부 주관 제도와의 충돌 우려를 나타내며 법 제정 이전에 건축계 내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재외동포재단

2022년 공동세미나’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4월 7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재외동포재단 2022년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성장 방안 및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세계한인경제포럼 소속 의원들과 2022년 봄 세계한인경제포럼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해외지역 운영위원들, 한상 리딩 CEO, 세계한인무역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재단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가 후원한 이 세미나는 1부 발제, 2부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무역경제신문 이금룡 대표이사가 ‘지속성장을 위한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윤원석 회장이 ‘경제외교와 한상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금룡 대표는 산업트렌드가 변하는 제4의 물결 속에서 창조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윤원석 회장은 한상들의 해외민간 외교를 뒷받침할 슈퍼 플랫폼이 필요



하다고 역설했다.

2부에서는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가 좌장으로 사회를 맡았고, 올해 가을 울산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은 김점배 회장과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박완섭 월드옥타 부이사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으며, 김현겸 미 달라스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인공지능 윤리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원욱·윤영찬·이용빈·정필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8일 ‘인공지능 윤리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윤리정책 입법 논의 현황을 공유하고 인간중심 인공지능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법적·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창동 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간담회에서는 문광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 부연구위원이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법제화 동향 및 시사점’을,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동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밖에 황의중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와 하정우 네이버 AI 연구소 소장도 토론자로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최종윤·조오섭·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는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질서를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최상명 우석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은 1부에서는 정의길 한겨레 선임기자, 박상남 한신대 글로벌 인재학부 교수, 조유미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 러시아의 대외정책, 대러제재, 한반도 평화에 대해 발제했으며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박사가 토론에 나섰다.

2부에서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포스트 우크라이나 세계질서에 대해 발제하고, 한상원 충북대 철학과 교수, 류경완 국제평화포럼 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초학력보장법’[2022.03.25.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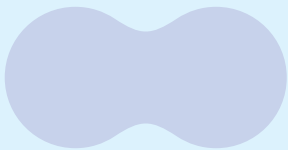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심화 및 학생들의 학습 결손,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3·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국어·수학·영어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의 비율이 현재 평가 기준으로 전환된 지난 201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이 1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원회는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이유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도 기초학력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추진하며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에 내실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학력보장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등의 교육감과 협의한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별 학력 수준과 기초학력 미달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



고, 학습지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으로 오는 9월까지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종합계획에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진단검사 실시, 학습지원 담당교사 지정·연수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와 관련, 교육부 측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밝혔다. 또, 기초학력 저하 및 학습 격차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에 대해 교육부 측은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기초학력진단평가 도구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맞춤형 ‘학습지원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방희중 연구관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교실과 학교 안, 학교 밖을 연계하는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고 125억 원을 투입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선도학교를 2021년 92개 교에서 2022년 500개 교로 확대한다. 또, 300억 원을 들여 담임교사, 상담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이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를 2021년 5천193개 교에서 2022년 6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모습. 교육부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맞춤형 ‘학습지원 교육’을 실시한다.

개 교로 확대한다. 예산 193억 원을 투입해 교사나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진단·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2021년 142개소에서 2022년 19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전형진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18)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등교제한 및 원격수업의 확대 등으로 학생의 학력 저하 및 학습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된 가운데 학생들의 학력 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에 국민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글 박민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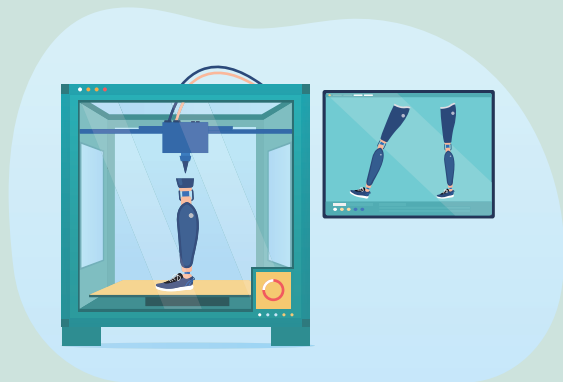
2021-12-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
2021-12-03 본회의 의결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고부가 맞춤형 의료산업을 견인하다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이번호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개발 분야 ‘매우우수과제’ 수상자로 선정한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하 첨단기술원)을 소개합니다. 첨단기술원은 2014년부터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비 194억 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3D프린팅 의료분야 적용’ 연구과제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동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경북대 첨단기술원은 3D융합기술지원센터, 의료융합기술센터, 레이저응용기술센터, 휴먼케어기술센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첨단기술원에는 ICT융합분야 교수 및 전임연구원 등 90여 명의 전문 인력이 다양한 ICT융합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첨단기술원이 최근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의료 분야다.

첨단기술원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구비하기 힘든 고가의 3D프린터, 3D스캐너 등을 구비하고 연구원들이 중소기업의 의뢰를 받아 제작 지원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첨단기술원은 3D프린터를 이용해 각종 의료기기(임플란트, 보형물, 보조기 등)를 설계, 제작하고 응용SW(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첨단기술원 측은 “고부가 맞춤형 의료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3D프린터를 이용해 제품 개발과 검증기간 단축,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동현 3D융합기술지원센터 센터장은 “입체형상을 적층해 제작하는 3D프린팅 기술로 기존 방식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다”면서 “기존에는 여러 부품으로 만들던 것을 일체화해서 제작하거나 경량화 설계도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의료기기를 환자 개개인의 신체와 환부의 형상과 상태에 따라 개인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3D프린터로 임플란트·보형물·보조기 등 의료기기 설계·제작

첨단기술원은 2014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94억 원을 지원받아 ‘ICT 기반의 의료용 3D프린팅 응용 SW 플랫폼 및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첨단기술원은 병원, 기업, 연구기관을 포함한 개발 컨소시엄으로 5년간 연구 끝에 정형외과, 치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4개 진료과에서 사용되는 임플란트, 보형물, 보조기 등을 설계·제작하는 데 활용되는 3D프린팅 응용기술을 개발했다.

첨단기술원의 개발컨소시엄은 △환자맞춤형 인공고관절, 견관절 치환술 맞춤형 수술기구(정형외과) △치과용 보철물과 수술 가이드를 위한 전문 SW(치과) △환자맞춤형 상지·하지보조기, 족부인솔, 소아두상교정기 설계 SW(재활의학과) △환자맞춤형 안와(眼窩) 골절 재건 임플란트 설계 SW(이비인후과) 등을 선보였다. 연구과정에서 특허출원 34건, 특허등록 18건 등을 냈고 SCI(Science Citation Index: 국제 과학 논문 색인)급 학술지에 논문 48편을 게재하는 등 다수의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 김동현 센터장은 “본 사업에서 개발한 3D프린팅 응용 SW 솔루션을 통해 1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측은 “연구가 시작된 2014년 당시 3D프린팅 기술을 의료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SW 솔루션 대부분을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던 실정이었다”라며 “이 연구로 3D프린팅 응용 관련 전문 SW 솔루션을 일부 국내기술로 확보해 해외기술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첨단기술원은 지난 2021년부터 내년까지 국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고기능 인체결합 의료기기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스



3D프린터로 제작한 의료기기 등에 대해 설명하는 김동현 3D융합기술지원센터장

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인체결합 의료기기산업은 인체와 결합(부착·삽입·이식)돼 인체 기능을 보완·보존·대체·확장하는 의료기기나 보조기기 및 관련 부품을 생산·제조,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을 말한다.

첨단기술원은 기업 등과 의료기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시제품 제작, 시험 및 성능평가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인증 획득, 각종 인허가, 마케팅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동현 센터장은 “첨단기술원은 2017년 GMP 인증과 제조업허가를 획득했으며, 이는 3D 프린팅 분야 비영리기관으로서의 최초의 사례”라며 “이로써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뿐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현재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상용화되고 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 기술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대구: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국회,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상황 점검,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환경노동위, '의원외교' 성과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1기관 유치 청신호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물 교육 분야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 1 기관 유치 제안서 제출을 요청해왔다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와 4월 4일 밝혔다. 카테고리 1 기관은 유네스코가 예산과 인사권을 직접 관여하는 직할기관으로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다.

박대출 위원장과 임종성 위원(더불어민주당), 김웅 위원(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된 환경노동위 대표단은 4월 1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를 방문, 샤밀라 나이트 베두엘레 유네스코 자연과학 ADG(사무총장보)를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물 교육 분야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 1 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대출 위원장은 “카테고리 1 기관은 교육 등 타 분야에 10개 기관이 있으나 물 관련 기관은 없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유치하기를 희망한다”며 유치 의사를 피력했다. 임종성 위원은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 지식을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웅 위원 또한 “유네스코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라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샤밀라 사무총장보는 “한국은 유네스코 물 분야 전반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이고 물 교육 분야 카테고리 1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한국의 유치가 가장 유력하며 본인 또한 이를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빨리 제안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표단은 OECD 환경장관회의 참석차 파리를 방문한 한정에 환경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유네스코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해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청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유치지원 진행 상황 점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4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그간의 유치추진 실적, 최근의 유치 경쟁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는 한편, 유치준비의 장애요인과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준비사항들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각각 운영되는 추진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경준 위원(국민의힘)은 “정부는 ‘유치지원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국회에는 유치특별위원회와 유치협력위원회가, 민간에 또 유치위원회가 있다. 부산 시에는 2030 엑스포 추진단이 있다. 이것을 통합해서 민간, 정부, 국회가 통합된 추진체계로 가야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제55보급창 이전 문제도 제기됐다. 엑스포가 예정지와 인접한 만큼 조속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배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제55보급창 이전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적인 행사라는 점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과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탈리아 모두 정부 ODA(공적개발원조)나 기업의 막후활동이 우리보다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 현재 대다수 회원국은 명확한 지지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병수 위원장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시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적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더불어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4월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창용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안정이 이뤄지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

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등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했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금리 시그널(신호) 등을 통해 증가세를 계속 완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금리 상승 영향으로 취약차주 등의 부실 위험이 현재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양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 질문에 “일한 만큼 명확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 개혁 방안을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 경쟁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한 역할에 대해 직급과 관계없이 명확한 크레딧을 받음으로써 더 열심히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공공기관과 비교해 조직 건강도가 낮다는 양금희 위원(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본인들이 한 연구가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우선으로 해결해서 본인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경험으로 봤을 때 아무리 위에서 조직 경영에 대한 개혁을 하더라도 밑에서 수긍하지 않으면 어렵다. 한두달 사이에 내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준영 위원(국민의힘)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 자체를 공시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자세한 정보의 경우 영업상 비밀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고, 여러 정책 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



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 위촉식 개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는 4월 28일 각각 오전 10시와 11시 국회 본관에서 김종민 위원, 윤두현 위원, 김희재 위원, 최형두 위원, 한준호 위원 등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언론·미디어 관계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들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 이인철 변호사가, ‘미디어 신뢰도 개선 분과’의 분과장으로 정정주 경북대 교수가 위촉됐다. 자문위원은 각 분과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언론·미디어 관련 학회·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의 활동기한과 동일한 5월 29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홍익표 위원장은 이번 위촉식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공정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인격권과도 직접 관련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 및 실천력 담보, 전문가로서 의견 제시 등 언론·미디어 제도개선을 위한 지혜를 마련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각 분과별로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대안부터 소수의견까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제시함으로써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장훈
국회경비대 본부과장

Q. 국회경비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주세요.

A. 국회경비대는 국가중요시설인 국회의 경호·경비를 위해 1951년 창설된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기관입니다. 국회의 대상으로 하는 테러 등 각종 위해요소와 불법집회 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국회의장과 국회를 방문하는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업무, 국회의장공관 경비 등의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경비대는 경비대장부터 현장 근무자까지 하나의 팀으로 ‘국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국회경비대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경찰관으로 입직한 1997년 무렵부터 청와대의 경

호·경비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서 근무를 시작해 7여 년간 근무했습니다. 이후 일선에서의 경험을 쌓고자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회를 간접적으로 접하며 언젠가 한번은 근무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이후 집회시위를 담당하는 경찰관기동대를 거쳐 국회경비대에 지원해 지난해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Q. 국회 외곽 경비가 경비대에서 경찰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외곽 경비 철수 후 대비책이 있다면.

A. 그간 국회 시설 경비를 위해 국회경비대 소속 105의무경찰대에 의무경찰을 배치, 운용해 왔으나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과 경찰 인력 증원’이 국정과제로 선정됨



에 따라 2018년부터 의무경찰이 단계적으로 감축됐고 2023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부 임무방법 등에 대해 국회사무처 및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비 업무가 기존 의무경찰에서 경찰관으로 바뀐다면 보다 전문적인 경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대통령 취임식 관련 준비상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정확한 취임식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준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회의로 계속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준비상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전한 행사관리를 위해 취임식 준비 TF팀을 구성해 취임식에 필요한 행사 장비 점검, 경호·경비 대책 수립 등 업무를 세분화시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경내 각 지역을 현장 답사해 보안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한 후 국회사무처와 협업해 보안 강화 조치 및 취약 지역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Q. 국회경비의 특징이나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본부과장으로 국회경비대에 있으면서 1년 365일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매일 개최되는 집회 시위 및 기자회견 등 여러 행사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는 날에도 항상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시에 인적 테러 및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장 근무자들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해야 합니다.

업무 중 선별적인 검문검색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입자와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 항상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Q. 국회 앞에서 장기적으로 시위하는 시위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국회 직원들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A. 국회 내 시위가 아니고 국회 외부에서 이뤄지는 시위는 영등포경찰서 소관 업무로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정문 앞에 차량을 대놓고 오랜 기간 고성방가를 하며 1인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분이 계신데, 정기적으로 측정한 결과 소음 정도가 법 위반 수준에 미치지 않고 차량 안에 운전자가 있어 강제 견인을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들었습니다. 다만 국회 앞 불법주차물에 대한 과태료는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 소망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한 사람의 경찰관으로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국회경비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3선(先) 운동’(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기)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조직 문화 속에서 늘 웃음꽃이 피는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가 중요 행사를 맞아 전 직원과 대원들 모두 역량을 집중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글 박민선 사진 유윤기

국회박물관 개관 국회와 민주주의 체험의 새로운 공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담은 국회박물관이 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에 맞추어 2022년 4월 정식 개관했다. 1998년 건립되었던 헌정기념관을 24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이다.

헌정기념관에서 국회박물관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

기존 헌정기념관에는 국회와 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의 의회민주주의관, 국회의장관, 헌법체험관, 기획전시실 등이 조성돼 있었다. 그러나 준공된 이후 20여 년 동안 장기적인 기본 계획 없이 콘텐츠와 디자인을 기획하다 보니, 전시의 통일성과 동선이 고려되지 못했다. 국립박물관(제1종 전문박물관, 2015년 9월 지정)임에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인의 문화향유·평생교육 증진이라는 박물관 역할 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전시실을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2018년 국회운영위원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해 부분 보완이 아닌 전면 개편으로 방향을 잡고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

전면 개편 사업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개년도에 걸친 건축공사와 전시실 조성공사를 거쳐 총 7개의 전시실을 새롭게 조성했다. 지하 1층에는 식당, 카페, 문화상품점, 장애인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을 마련했으며, 사무공간과 수장고까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2021년 3월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회박물관’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다. 국민과 소통할 수



윤희호 과장
문화소통기획관 참관전시담당관실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나와 국회, 민주주의가 함께하는 민주주의 역사의 공간

새로운 국회박물관은 국회의 역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기획했다. ‘나로 시작된 국회, 국회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속 나의 삶’이라는 국회박물관 전시 메시지가 잘 드러나도록 공간을 구획하고 유물을 배치했다. 전시실에는 임시의정원부터 최근(제21대) 국회까지의 주요 정치사와 의정활동을 시간순으로 전개함으로써 전시 동선을 명확히 설정했다.

1전시실은 ‘임시의정원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를 주제로 대한민국헌법의 근간인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민족국가 건설의 청사진인 ‘대한민국건국강령’을 전시했다. 제헌국회부터 제12대국회까지를 다룬 2전시실에서 전시 동선에 따라 대별 전시물을 관람하면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87년 민주화 항쟁의 내용을 담은 전시 공간에 도착한다. ‘민주화를 위해 국회가 걸어온 길’이라는 전시 주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의도했다.

3전시실은 대별로 패널과 함께 키오스크와 국회의원 아카이브 등 디지털 전시물을 활용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내용을 담는 한편, 최신 의정이슈 등을 반영하려는 취지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소개하는 4전시실에서는 의장 집무실을 재현하고 AR포토존을 설치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국회의 역할과 구성, 조직과 기능 등을 관람객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살아 있는 정치사를 다루는 만큼, 정치적 편향을 극복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 콘텐츠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 검토와 외부 감수를 거쳤다. 그럼에도 참관객들에게 대한민국 국회와 민주주의에 대해 잘못 전달된 정보가 없는지 조심스럽다.

국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체험하는 공간

전시실이 어제의 국회를 전시한 공간이라면, 국회체험관과 어린이박물관은 오늘과 내일의 국회를 체험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전면 개편의 효과는 국회체험관과 어린이박물관 신설에서 두드러진다.

국회체험관은 본회의장과 유사하게 전시실을 구현하고, 국회 본회의 투표를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참관객이 1급 보안시설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지 않고도 본회의장에서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실감형 콘텐츠다. 국회체험관을 통해 전시에서 체험으로 본회의장의 개념 전환을 시도했다.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법과 규칙을 배울 수 있도록 각종 체험 시설을 마련해놓았다. 부모와 교사만의 전유물로 알았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보는 것이 어린이 입장에서는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어린이박물관이 미래의 유권자인 어린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국회박물관은 국회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현정자료를 조사·수집하고, 전시하며, 국회와 의회민주주의를 교육·체험하는 ‘박물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냉정한 평가와 피드백 속에 국회박물관이 국회, 민주주의와 함께하며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 🏠

소록도의 두 천사를 만나다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



마가렛 간호사와 면담을 하고 있는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왼쪽에서 두 번째)



김근식 기획1담당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지난 4월 초 협치 강화를 위한 양원제·다당제의 실제 운용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을 모시고 유럽 주요국의 의회를 순차적으로 바쁘게 방문하던 중이었다. 체코·독일의 의회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의회를 시찰한 뒤 독일로 이동하기 전, 결이 다른 하나의 일정이 있었다.

소록도에서 40여 년간 봉사하다 홀연히 떠난 두 간호사

전라남도 소록도에서 무급으로 봉사하며 지내다가 2005년 홀연 떠난 두



이춘석 사무총장이 마리안느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간호사분을 찾아뵙는 일정이었다. 지난해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직접 방문하고 인사하려 했으나 다른 일정관계로 부득이하게 선물만을 전달했던 그 두 분에게 이번에 이춘석 총장이 직접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정이었다.

비엔나에서 출발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초원지대를 3시간여 달려 도착한 곳은 소록도에서 봉사한 두 간호사분이 은퇴 후 거처를 마련한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였다.

“소록도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작은 할매, 한국명 백수선)가 지내는 요양원과 마리안느 스토거 간호사(큰 할매, 한국명 고지선)가 지내는 시골마을의 저택을 순차적으로 들

러 뒀장, 홍삼 등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두 분은 어눌한 듯하면서도 뚜렷한 한국어로 “소록도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연이어 하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소록도는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 반도의 끝인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5분을 들어가면 있는 면적 3.79km²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어린 사슴과 비슷하다고 해 소록도라고 이름 붙여진 이 섬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병(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격리치료를 한 아픈 역사가 있다.

특히 한센병이 불치병·유전병, 쉽게 전염되는 병으로 오인되던 시절, 그릇된 사회인식으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임신 금지·강제 낙태 및 정관수술 등의 인권유린적 행태



마리안느(왼쪽)와 마가렛 간호사

가 자행되기도 해 부끄러운 역사의 현장으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편견과 차별이 만연하던 시기에 마리안느는 1962년에, 마가렛은 1966년에 각각 소록도 간호사로 파견되었다가 공식적인 파견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록도에 남아 2005년까지 약 40여 년의 세월동안 무급으로 봉사하며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했다.

특히 당시 병원 의사들이 마스크와 장갑을 겹겹이 끼고도 멀리 떨어져서 각종 도구로만 환자들을 치료하던 것과 달리,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는 하얀 가운만을 걸친 채 환부에 직접 손을 갖다 대고 소독을 하는 방식으

로 치료해 환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 단순한 치료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나눠주기도 하고, 본국의 지원을 받아 정신병동, 결핵병동, 맹인병동, 영아원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렇게 헌신적이었던 간호사 두 분은 2005년 11월 22일 “제대로 일할 수 없어 오히려 부담만 줄까봐 조용히 떠난다”는 내용의 편지 한 장만을 남겨놓은 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여야 의원 109명, 노벨평화상 추천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모두 내어준 간호사 두 분은 정작 본인의 노후와 건강을 챙기지 않아 연금도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번 이춘석 총장의 방문 인사는 두 분께 받기만 한 대한민국이, 모두 내어주느라 정작 자신들을 챙기지 못한 두 분께 조금이나마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1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2017년 이후 계속 추진하고 있는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귀감이 되는 헌신적인 삶을 사셨던 두 분을 위해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내가 한 일 중 특별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며 손사래를 치시지만, 이같은 보은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져 두 분의 헌신적인 삶이 많은 사람에게 울림이 되었다는 증표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본다. 🍵



서부해당화

봄비가 내려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곡우(穀雨·4월 20일)를 앞두고 국회에 서부해당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서부해당화는 대개 벚꽃이 지고 난 다음 나무 전체를 뒤덮어버릴 만큼 많은 꽃이 팝니다. 하얀 눈이 내리듯 떨어지는 꽃을 보니 지나가는 봄이 아쉽기만 합니다. 🌸

글 박민선 사진 김지범

NEWS



제62주년 4·19혁명 기념 민주묘지 참배

박병석 국회의장이 4월 19일 4·19혁명 제62주년을 맞아 국회의 장단,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학생혁명기념탑 참배를 마친 후 국회 참배단을 대표해 ‘민주영령의 고귀한 희생. 참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박병석 국회의장,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 전달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20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강원 등 산불피해 의연금을 전달했다.

박 의장은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의연금 전달식에서 “나눔은 여름에는 부채와 같고 겨울에는 난로와 같은 것”이라며 “환난구휼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전통이 있는데, 국회의 작은 모금이 이재민의 재기에 도움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연금은 국회의장 등 국회 소속 공무원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스웨덴 의회 의장과 한반도 평화·경협 등 논의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11일 박 의장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스웨덴 의회 의장과 양국 간 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등을 놓고 회담했다.

박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측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노를리엔 의장과 스웨덴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고, 노를리엔 의장은 “스웨덴은 항상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한국은 러시아가 전쟁을 멈췄으면 한다”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한국의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스웨덴 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한국은 제2도시 부산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준비하고 있고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도 입후보했다”면서 “한국이 두 무대에서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스웨덴 의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식목일 맞아 국회 잔디광장에 기념식수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5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수를 했다. 박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념식수 옆에 소나무를 식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명우 도서관장, 임익상 예산정책처장, 김만홍 입법조사처장, 김병관 국회의장비서실장, 조용복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19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의장은 “의원 외교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장관의 임기는 짧지만, 의원들은 개인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교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동안 의원외교가 평가절하된 점도 있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본래 목적에 맞는 의원외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이숙현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장은 “외교관 활동을 하던 시절에 보면, 의원님이나 의장단의 방문이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용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면서 “의원외교활동이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영상연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월 11일 대한민국

NEWS

국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영상연설을 했다. 영상연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은 연설 인사에서 “지난 주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시설을 방문하고 고려인협회장님을 만나 동포와 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며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군사시설이 아닌 우크라이나의 대학, 기차역, 공항 등의 시설을 공격했고, 지금까지 교육기관 900곳 이상과 수많은 병원이 파괴됐다”고 전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을 겪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결국 이겨냈다. 당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하고,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추가 경제제재와 군사 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 발간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법제실은 조세분야의 대통령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행정입법 분석: 조세분야’를 발간했다.

전상수 국회 입법차장은 발간사를 통해 “조세법의 전체 조문 중 위임조문의 비율이 평균 62%이고,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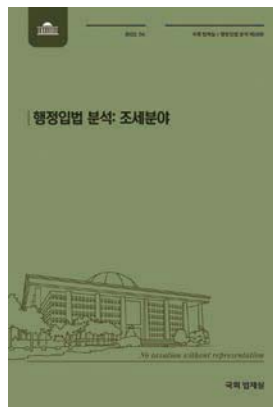
경우 그 비율이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조세관계법령에서 위임입법의 증가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분야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 조세분야 법률 33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365개를 검토해 총 45건의 개선의견을 발굴했다.

발굴한 개선의견은 법제실이 사전에 유형화한 여섯 가지 분석기준에 따라 구분했는데, 상위 법률의 취지·내용과 불합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 부과 8건, 법령 체계 등의 미정비 8건, 법률 정비가 필요한 사항 8건, 행정입법 부작위 5건, 포괄적 재위임 1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부가가치세액 공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률의 위임없이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인세의 감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법인세법 시행규칙’), ▲법률에서 조세범칙사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은 관할 세무서장에서 지방국세청장으로 관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시행령에 관할 변경 요건을 불명확하게 위임하고 있는데, 조세범칙사건 조사의 권리침해적인 성격을 고려해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이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분야별로 중점분석 대상을 선정해





매년 행정입법 분석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조세분야 행정입법 분석서를 통해 국민의 권리증진은 물론 조세법률주의 및 의회민주주의의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회부산도서관, 3월 31일 개관 기념식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월 31일 국회부산도서관 1층 로비에서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정의화 전(前) 국회의장, 김도읍·백종현·이주환·김미애 의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의장 등 국회·부산광역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부산은 국회도서관의 뿌리”라며 “피난수도 부산에서 임시로 등지를 틀었던 국회도서관이 다시 부산시민 품으로 돌아왔다”고 밝히고 “70년간 쌓아올린 지식정보서비스와 의정 노하우로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를 이끄는 지혜의 보고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개관선언에서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

서 전쟁 중에도 책을 통한 ‘정신무장’을 강조했던 국회의 결의를 다시 부산에서 다짐한다”며 “국회부산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개관 기념식 종료 후 행사참석자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의회자료실, 주제자료실 등 열람공간을 둘러보고, 상설전시 ‘국회國會 나라의 뜻이 모이다와 국회도서관 개관 70주년 기념 기획 전시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시작’을 관람했다.

국회부산도서관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국회에산정책처, 국문 홈페이지 개편

국회에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지난 3월 국문 홈페이지(www.na.bo.go.kr)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과 콘텐츠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새롭게 연 홈페이지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여러 디바이스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역할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직관적인 메뉴 구성으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 검색된 파일의 ‘키워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검색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 주 간 가장 많이 조회된 발간물 TOP5를 제공하는 등 콘텐츠를 강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이용자들의

NEWS

편의성과 만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요르단·오만 상원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방문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아프리카·중동 유력인사 초청사업에 따라 방한한 하툴 부란 요르단 상원의원과 알 타이에 오만 상원의원이 4월 14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홍)를 방문해 주요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두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소개를 받고,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게임셋다운제의 효과를 냉정히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후 해당 제도 폐지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상세히 문의했다.

또한, SNS가 정치적 양극화 또는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코로나19 극복,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통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하툴 부란 의원은 시리아 난민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요르단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만홍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두 의원의 방문으로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요르단, 오만 양국 의회와 우리나라 의회의 교류·협력의 한층 더 심화·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비전 2037 대국민 보고회' 개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국회도서관과 공동기획으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 전환을 위한 미래비전 2037 대국민 보고회'를 4월 5일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개최했다.

대국민 보고회는 '미래비전 2037' 연구 간사기관을 맡았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진이 보고서 주요 내용을 발제하고, 삶의 질, 경제, 디지털 전환, 공공갈등, 지역, 국가 미래상, 국가 전략 등 주요 분야별 신정부 국정운영 방향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국민 보고회는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 결과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의 성과를 일반 국민 대상으로 소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미래비전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반목과 대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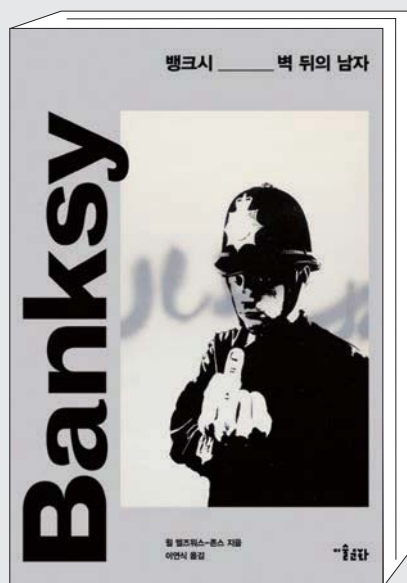
국회 간행물 표준 디자인 개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국회 간행물 표지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뱅크시: 벽 뒤의 남자



저 자 윌 엘즈워스-존스
역 자 이연식
출판사 미술문학
출판일 2021. 11.

예술은 때와 장소에 의해 기호화된다. 때와 장소라는 두 요소는 관객이 무엇이 예술이고 예술이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돕는다. 이를테면 미술관을 방문한 관객은 그곳에 걸려 있는 그림을 ‘예술’이라고 인지한다.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주는 신뢰다. 길거리 아무 벽에 스프레이로 그려진 그림은 낙서일 수 있지만, 같은 그림이 유명 미술관에 전시되었을 때는 ‘작품’이 된다. 대개 관객들은 미술관을 방문하면 그곳에 전시된 작품의 진위나 수준에 대해 크게 의심하지 않고 예술로 받아들인다.

2003년 런던 테이트 미술관의 한 전시실,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벽면에 붙인 후 자리를 떠난다. 그가 사라지고 난 후 벽면에 남겨진 것은 그의 그림. 며칠 동안 그 그림은 테이트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미술관에서는 허락한 적 없는, 심지어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도 못한 그의 작품을 벽면에 전시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진지하게 감상한다. 이 실험적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은 바로 스트리트 아티스트 뱅크시(Banksy)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퍼포먼스로 그는 스트리트 아트와 순수 예술 사이에 예술성의 차이가 있기보다는 미술관이라는 장소가 부여하는 맥락이 해당 작품을 예술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감상할 명분을 주었다고 믿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해 낸 셈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예술가의 일은 때로 작품을 창조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예술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작품에 영향을 미칠만한 신화를 창조하기도 한다. 예술의 가치는 기존 예술계에서 정한 미학적 규칙에 의해 판단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그 규칙을 완전히 깨부숨



으로써 아티스트의 예술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하게 객관적인 기준은 실로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높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 바라는 현대미술 작가라면 자신의 신화를 담은 일련의 ‘퍼포먼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뱅크시는 매우 성공적으로 자신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라 할 수 있다. 그는 환경 문제, 반전(反戰), 동성애, 공권력 비판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메시지를 그만의 친숙한 표현 양식으로 전달하며 꾸준히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도, 정작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김으로써 오히려 그의 정체에 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태껏 그의 본명조차도 확실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오히려 기관이나 공무원 등과 협업할 때 중요한 계약 조건 중 하나로 그의 신원과 관련된 사항을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는다. 정체를 숨기면 숨길수록 역설적으로 그에 대한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책의 저자인 엘즈위스-존스는 이러한 뱅크시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저자는 흩어져 있는 뱅크시의 정체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여주면서도, 막상 그의 익명성을 밝히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오히려 모두가 유명해지려는 이 시대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감추는 전략으로 유명해진 그의 역설에 더 집중한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이 책은 뱅크시의 예술적 여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의 행보를 함께 따라가면서도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

려고 노력한다.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그간 뱅크시가 해온 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일관된 신념을 표현해 왔음을 알게 되면서도, 동시에 치솟는 상업성 때문에 반체제적 성향의 메시지가 희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작가로서의 혼란과 고민을 짐작하게 된다.

또한, 뱅크시의 작품이 누구에게나 직관적으로 이해될 만큼 ‘친숙’해서 새로운 관람객과 예술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한 반면, 그의 작품에 대해 논하고 이야기를 끌어갈 만한 이론적 바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약점이자 한계임을 지적받고 있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영국의 평론가 조너선 존스는 일찍이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터너상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술계에서 인정받는 대표적 미술상인 터너상에 선정된 작품의 예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좋아할 만한 ‘쉬운’ 작품임을 비꼰 바 있다.

저자 역시 뱅크시의 작품을 설명할 이론이 없다는 것은 그의 예술이 가지는 한계임을 인정하면서도 ‘뱅크시 자신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인다. 이 책은 뱅크시의 그러한 빈칸을 채워주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무엇보다도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등장하는 뱅크시의 작품들과 다양한 사진들은 독자들에게 뱅크시의 작품을 경험하고 그들의 상상력을 확인시켜주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 책은 예술계의 규칙과 위계를 거슬러 ‘거꾸로’ 걸어간 뱅크시의 예술 여정을 함께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예술이 무엇인지, 예술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

글 김은정(세명대 교수)

사나이가 세상에 나설 때엔 행동을 구차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봄은 왔다. 봄바람과 함께 꽃들이 피는가 했더니 며칠 사이에 다 떠나고 온 산들은 이미 신록으로 물드는 중이다. 봄에 생각나는 사람과 시가 있다. 조선 광해군 집권기의 관료이자 시인인 구원 이춘원(李春元: 1571~1634)과 그가 봄을 읊은 시다.

봄바람(春風)

봄바람 따라서 이곳에 왔다

봄바람 따라서 되돌아 간다.

호남의 온갖 화류들이 나더러 봄바람 친구라 하네.

(偶逐春風來 更逐春風廻 湖南萬花柳 謂我春風友. 九畹集 卷一 春風)

이춘원이 조선 광해군 8년 정사년(1617)에 충청도 감사로 부임했다가 이듬해인 무오년(1618)에 파직되어 돌아올 때 지은 시로 그의 나이 47세 때다.

이보다 앞선 광해군 5년(1613)에 박응서 등의 무고로 옥사가 일어나 인목대비(仁穆大妃: 1584~1632)를 서궁(西宮)에 유폐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때 유생 조직(趙潁)이 유폐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자, 승지들이 배척하고 받지 않으려 했다. 승지 중의 한 명이던 이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 상소를 접수하고 광해군에게 올렸다. 이 때문에 그는 파직되었다가 다음 해에 다시 승지에 임명되고 이어서 병조 참의로 전보되었다. 을묘년(1615)에는 다시 승지가 되었다가 품계가 가선대부(嘉善大夫: 종2품 문관계)로 승진했다. 참판급(지금의 차관)으로 승진한 것이다.

정사년(1617)에 충청도 관찰사직을 임명받았다. 간신

들이 또 대비의 존호 사용 금지와 관련 의전을 폐기하자 내외의 관원들이 모두 따랐지만 이춘원과 한 두 관찰사가 봉물을 올리면서 대비의 칭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간신들이 분개해 멀리 귀양 보내려다가 감사직만 삭탈하는 데 그쳤다. 그는 서인(西人)이면서도 북인(北人) 정권에서 승지와 관찰사라는 요직을 번갈아가며 맡았다. 그러면서도 북인들이 강력히 추진하던 대비의 유폐와 폐비에는 앞서서 막고 나서는 용기를 보였다. 다음 시도 비슷한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오동나무 꽃(桐花)

꽃중에 늦은 꽃 오동꽃 한송이를

뚝어서 꽃병에 꽂으니 향기가 특별하이.

몇 번이고 봄바람에 피었다 지고나면

거문고 되어 늦은 밤 초당에서 슬피 울리.

(桐花一朵殿群芳 折插金壺別有香 幾度春風開落後 化身琴瑟夜鳴堂 九畹集卷二 桐花)

오동나무꽃은 늦은 봄에 피는 꽃이고, 오동나무는 좋은 목재로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며 하는 말인 듯하다.

광해군 13년(1621) 51세 되던 해에 청나라 사신이 입국했다. 이때 이춘원이 평안도 안주(安州)로 가서 영접하다가 과로했던 탓인지 갑자기 중풍(中風)에 걸렸고, 들것에 실려 귀가했다. 이후로 평생 원편의 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으로 인조가 즉위한 초기에 물러났던 옛 신하들을 다시 등용했는데, 그의 불운을 애석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편안한 관직에 임명해 병을 요양하도록 배려하려는 이들이 있었다. 이때 큰소리로 반대하면서 “사나이가 세상에 나설 때는 구차스럽게 행동해서는 안된다. 내가 부축을 받아 일어나고 지팡이를 짚고 가서 엎드려서 사람을 대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하고는,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이춘원은 본시 독서에만 빠져서 생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생활이 매우 곤궁하여 처자식이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아 그날그날 지낼 뿐 저축이 없었다. 그런데도 손님이 찾아오면 술상을 차려서 한껏 취하도록 마시면서 손님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어쩌다 몸을 위해 술을 줄일 것을 권하면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이 목숨을 아끼는 것은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 서이다. 설령 내가 즐기던 것을 끊고 친구들을 사절한 채 조심스럽게 건강을 챙긴다면 몇 해를 더 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몇 해를 더 사는 것과 지금의 이 생활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춘원의 원 이름은 신원(信元)이고 자는 입지(立之)이며, 본관은 함평(咸平)이다. 광해군 때에 피휘(避諱)할 일이 있어서 이름을 춘원(春元) 자를 원길(元吉)로 개명했다. 친구들은 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구원은 그의 별호다. 나이가 들면서는 남양(南陽) 홍지성(洪至誠)에게 글을 배웠는데, 홍지성의 학문은 그의 아버지인 조충(趙叢) 선생 홍유손(洪裕孫)에게서 나왔고, 조충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과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다. 그 문하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으나 그보다 뛰어난 자는 없었다 한다. 그 후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정승으로 있다가 파직되어 영평(永平)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가 배웠는데, 사암 역시 공을 재주가 있다고 여기고 깊은 뜻을 모두 다 가르쳐 주어 문리가 더욱 진보했다.

20세 되던 해에는 사마시에 급제하고, 26세(1596)에는 문과에 급제했다. 승문원(承文院)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에 보임됐다가 박사(博士)로 올랐고, 다시 병조 좌랑에 제수되어 지제교(知製敎)를 겸했다. 1597년에는 광양현감으로 남원을 포위한 왜군과의 전투에 참전했다. 구원의 시는 자연 그대로의 빼어난 색깔이 있어 문채를 내고 수식을 하지 않는 데도 뛰어난 부분은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높고, 보통의 부분도 미치기 어려운 정도였다. 문장 또한 고아하고 법도가 있다는 평이다.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조선의 대표적 시인 34명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구원이 들어 있어서, 그의 문단에서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준다.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시 한 수를 더 읽어본다.

홀로 일어나서(獨起)

홀로 일어나 국화 꽃 따고 농촌의 가을은 풍성도 하다.

불어오는 바람은 모파를 떨켜주고

비 내린 개울은 물고기 주네.

낮은 벼슬 정체됐다 운명을 탓 하겠나

어렵고 괴로운 건 소위를 당해서지.

내 삶이 너무도 쓸쓸하고 외롭지만

구태여 책을 쓰며 외면 않으리.

(獨起掇幽菊 田園秋景餘 林風投木果 溪雨薦嘉魚 淹泊寧論命 艱虞祇見疏 吾生太寂寞 不必草玄書 九畹集卷一 獨起)

봄은 만물이 새롭게 시작하는 때다.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처럼 우리의 정치환경도 봄을 맞아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변화에는 선변(善變)도 있고 악변(惡變)도 있다. 선변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

글 신승운(한국고전번역원장)

국회박물관에 전시된 소중한 전원위원회 회의록

2022년 4월 11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국회박물관이 개관했다. 이번 국회박물관에 전시된 자료 중 기증품이 있는데 그 기증품 중에 국회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회의록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의정기록과에서 회의록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했더니 4차의 전원위원회 속기록과 1차의 비공개회의 전원위원회 속기록, 1차의 비공개회의 속기록이 있었다. 그중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속기록은 국회박물관 개관에 맞춰 한글 텍스트화를 끝낸 후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등록,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원위원회 연혁을 보면 1919년 7월 7일 상해 대한민국의정원에서 전원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제헌국회부터 제4대국회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고, 제5대 초반에 폐지됐다가 제15대 국회 말 재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¹⁾

제15대국회 말 전원위원회가 재도입된 이후부터의 회의록은 국회회의록시스템에 모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제헌부터 제5대까지는 전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됐다는 기록은 있지만 실제 회의록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다가 이번 기증품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록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제헌부터 제2대국회까지는 속기사의 부족과 인쇄시설의 미비로 본회의의 속기록만 작성, 발간했고 위원회는 회의의 경과와 결과를 요약하는 회의록만 작성했다. 그런데 제2대국회 말 예산결산위원회 신설 당시 동 위원회

초대 위원장인 오위영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속기록 작성을 요구함에 따라 동 위원회 속기록을 작성한 것이 위원회 속기록 작성의 효시다.²⁾ 이런 까닭으로 이번 전원위원회 회의록 발굴 전에는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제헌과 제2대국회까지는 본회의 회의록만 등록된 상태였다.

전원위원회가 실제 열렸던 것을 찾아보면, 제헌국회에서 첫째, 국회법 제정(1948. 10. 2) 이전인 1948년 9월 16일과 17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동의안’을 안건으로 이틀에 걸쳐서 열렸는데, 본회의 도중 전원위원회를 개회하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전원위원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헌 1회 67차 본회의(1948년 9월 16일)

2. 전원위원회개회의 건

○배중혁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와 외무국방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지금 곧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심사보고를 듣는 동시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 중간 생략 -

○부의장 김약수 이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한미협정에 대해서 토의하자는 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미협정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어느 부문의 중대한 것을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면 본회의는 없어지기 때문에 잠깐 말씀하

1) 국회보 2005년 2월호. 112쪽

2) 국회사무처 38년사. 145쪽



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 동의 표결에 부칩니다.

(거수표결)

재석 147, 가 123, 부 3, 지금은 동의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금후로는 전원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관계상 한 5분쯤만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상오 11시 회의중지하고 전원위원회를 개의회)

둘째, 1949년 4월 28일과 4월 29일, ‘194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 동안 전원위원회가 개의회였다. 이때의 회의록이 이번에 발굴된 것이다.

제헌 2회 1차 전원위원회(1949년 4월 28일)

(하오 3시55분 개의)

제헌 2회 2차 전원위원회(1949년 4월 29일)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지대형 개회합니다.

착석해 주십시오.

어저께 전원회의의 날짜를 제한이 없이 열다가 저녁 7시에 그만두고 오늘 제2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지대형 이 불초한 사람을 전원위원장으로 재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1950년 2월 27일 전원위원회는 ‘비공개회의의 국정감사 보고’를 안건으로 개의회였다. 이 회의록은 비공개회의라서 한글 텍스트화하지 않았다.

제2대국회에서는 첫째, 1951년 6월 6일 제5차 본회의 중 비공개 전원위원회를 개의회였다. 이 회의록도 마찬가지로 비공개회의라고 아예 명명되어 있어서 자료로만 가지고 있다. 둘째, 1951년 11월 29일과 30일에 ‘1951년도 내무

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전원위원회가 개의회였다. 셋째, 1952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1952년도 가예산안’을 안건으로 전원위원회가 개의회였다. 넷째, 1952년 7월 3일과 7월 4일 양일간에 걸쳐 헌법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양자 회의록도 이번에 발굴된 것이다.

2대 13회 1차 전원위원회(1952년 7월 3일)

(하오 0시55분 개의)

○위원장 지대형 불초 이 사람을 전원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대 13회 2차 전원위원회(1952년 7월 4일)

(하오 4시35분 개의)

○전원위원장 지청천 개회합니다. 좌석 정돈하세요.

작야 이래 이제까지 각파 대표들이 회의한 결과를 중간보고하겠습니다.

서이환 위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각파 교섭단체 회의결과 보고) -

○서이환 위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대국회는 총 4회의 전원위원장 선거가 있었고, 제4대국회는 총 3회의 전원위원장 선거가 있었으나 실제 개회된 전원위원회는 한 차례도 없었다. 제5대국회 초반 전원위원회와 본회의가 중복심의한다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국회가 예산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심사를 생략함에 따라 유명무실해지면서 제9차 국회법을 개정할 때 제도 자체가 폐지됐다.

이상과 같이 국회박물관이 역사적인 개관을 하면서 중요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이 발굴되는 쾌거를 올리게 됐다. 앞으로 이런 회의록들이 발굴되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 🍵

글 백순정 서기관(의정기록1과)



충청북도 보은군의 법주사 경내 전경.



우리 건축의 뿌리를 찾아서

사찰, 그냥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교 교리로 읽는 우리 산사의 배치 구성



우리 문화재의 70%는 불교 문화재다. 무심코 쓰는 단어나 생활 격언 등 국민의 바탕 정서에도 불교적 세계관이 짙게 깔려 있다. 4차산업혁명의 선두 국가에 올라서서 첨단기술이 실생활까지 파고든 21세기에도 불교는 여전히 한국의 정신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도 그렇다. 전국에 있는 정확한 사찰 숫자를 세는 일이 무의미할 정도로 사찰 건축의 위세는 막강하다. 전통건축이나 불교건축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찰만도 100여 곳은 된다. 각 사찰에서 다시 건축적 의미를 갖는 전각이 최소한 몇 채, 많으면 십여 채씩은 되므로 개별 건물을 기준으로 따지면 사찰은 우리 건축의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룬다 할 수 있다.



사찰을 읽는 건축적 관점은 크게 개별 건물과 배치 구성의 두 가지일 것이다. 한국 사찰이 대부분 자연 속에 있는 ‘산사(山寺)’임을 볼 때 둘 가운데 배치 구성이 더 중요해 보인다. 종교건축은 교리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일이 가장 기본인데, 우리의 산사에서는 배치 구성에 불교 교리가 잘 드러난다. 개별 건물은 사찰이라고 특별히 두드러지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전통 건축의 일반론에 포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불교 교리와 우리 산사의 배치 구성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우선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불교 교리 자체가 분량과 분파가 많고 무척 다양하다는 점과 배치 구성에서 건축적 의미를 찾을만한 사찰 또한 앞에서 밝힌 대로 100여 곳이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사찰을 교리와 연관해서 해석하는 경우 그 분량이 무한대로 증폭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산사 구성 일반론의 관점에서 네 가지로 압축해 보자. 거의 모든 산사는 이 네 가지 구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는 각각 핵심적인 불교 교리가 대응한다.

네 가지 구도로 구성되는 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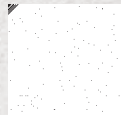
첫째, 산사의 오름 구도다. 산에 위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오르막을 올라 진입한다. 대웅전 속 불상을 깨달음의 종점으로 삼아 산기슭을 오르는 점증 구도다. 이는 교리에서는 수행과 관련한 점증 구도에 대응한다. 불교는 욕망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향하는 수행의 종교다. 석가가 설한 근본 경전 가운데에는 수행을 대표하는 법화경(法華經)이 대체로 이 해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산사는 각자만의 특징적인 오름 구도를 갖는데 이는 법화

경에서 설한 깨달음의 두 가지 방식인 ‘돈점이교(頓漸二敎)’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식이다.

둘째, ‘대웅전’의 존재다. ‘대웅(大雄)’은 곧 석가불을 말하는데, 그 불상을 모신 대웅전은 깨달음의 절정을 상징하면서 산사의 오름 구도에서 마지막 종점에 해당한다. 석가의 근본 경전 가운데에는 깨달음의 순간을 초세간(超世間)의 장면으로 기술한 화엄경(華嚴經)에 대응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깨달음의 희열을 온갖 꽃과 칠보의 ‘화려(華麗)하면서 장엄(莊嚴)한’ 상태로 표현했는데, 대웅전을 화려하게 장식한 공포(拱包) 구조, 단청, 꽃살 등이 이를 건축으로 옮긴 것이다. 무소유와 공(空) 사상을 가르치는 사찰 전각을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게 불일치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화엄의 절정을 예술적으로 극화한 것이다.

셋째, 산문의 특이한 형식이다. 산사의 표준 구성에는 세 개의 문, 즉 ‘일주문-천왕문-해탈문’의 삼문이 있는데 모두 문짝이 없다. 이는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뜻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산사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며, 확장하면 여러 전각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떼어서 배치해서 건물들 사이에 여백을 많이 두는 이유와도 연관된다. 근본 불교에서는 ‘연기론’, ‘불이’ 사상, ‘공’ 사상 등 여러 핵심 교리와 대응된다. 모두 불교의 핵심 교리인 만큼 여러 근본 경전에 공통으로 나오는데, 석가 경전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아함경(阿含經) 계열에 대체로 고루 분포해 있다.

연기론(緣起論)은 ‘인연소기(因緣所起)’의 준말로, 사물의 현상과 존재는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해서 성립한다는 교리다. 우리는 보통 현상과 존재가



그 자체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갖는다고 알지만, 불교에 서는 반대로 인연과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설한다. 문짝 없는 산문은 이를 반영한다.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은 본래부터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호작용의 결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연기론은 ‘불이(不貳)’와 상통한다. ‘불이’는 말 그대로 사물의 본성은 ‘둘이 아니다’라는 교리다. 우리는 세상을 수없이 다양한 쌍 개념, 즉 이분법으로 갈라서 본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分別심이 짓는 허상일 뿐, 실제 사물에는 둘로 가를만한 이분법이 없다고 가르친다. 문짝을 두지 않고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을 가르지 않는 우리 산문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연기론은 또한 ‘공(空)’ 사상과도 통한다. 불교의 공 사상은 단순히 ‘그릇이 비었다’는 물리적 현상을 넘어 세상 만물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상대적 존재론을 뜻한다. 그 배경에 연기론이 있다. 하나의 원인도 다른 원인과 상호작용한 결과이므로 어느 원인도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되지 않는 수많은 원인의 결과물인 세상 만물은 따라서 한 가지 실체로 고정될 수 없다. 산사의 구성에서는 대웅전 앞 중정(中庭)의 빈 마당과 함께 문짝 없는 산문이 공 사상을 설하는 대표적인 짝이다.

넷째, 사찰을 구성하는 전각, 석상, 불상, 당간지주, 돌탑 등 유형 요소의 불교적 의미다. 단순한 물질 덩어리인 이런 유형 요소가 종교적 상징성과 불교적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는 ‘체상용(體相用) 삼대(三大)’ 사상이 대용한다. 석가의 근본 교리에도 나오며 특히 후대의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자세하게 정리, 발전한 사상이

다. 사물의 존재와 의미에는 ‘본질=체’, ‘모습=상’, 그리고 ‘쓰임새=용’의 삼대가 있다는 교리다.

사찰의 유형 요소에 적용하면, 우선 단순 물질은 ‘체대’에 의해 ‘불교적 의미를 갖는 종교 요소’라는 본질을 획득한다. 다음, ‘상대’에 의해 석가의 불법을 설하는 종교 텍스트의 역할로 승격한다. 마지막으로 ‘용대’에 의해 팍팍한 중생들의 일상생활을 정신적으로 치유해주며 종교적으로 기능한다. ☺

글 임석재(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경상북도 영주시의 부석사 일주문. 문짝 없는 산문은 석가의 연기론을 말한다.

바람꽃·노랑무늬붓꽃·노루오줌,
수많은 들꽃이 별처럼 반짝이다

태백 대덕산



오솔길을 지나는 길에 마주친 야생화 군락지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만물이 생동하는 따스한 봄날의 절정이며, 꽃들이 만발하고 신록이 짙어 가는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문인들이 5월을 찬양했다. 그중에 누구보다 5월을 사랑한 수필가 피천득은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라고 5월의 이미지를 묘사했다. 또 5월을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하다고 찬양한 ‘신록예찬’(이양하)도 있다.

그러나 봄날의 싱그러움 푸름도 불과 몇 주뿐이다. 금세 한여름으로 넘어갈 것이다. 5월엔 당장 방구석을 박차고 찬란한 계절 속으로 달려가기에 좋을 때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계절이지만, 5월이라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강원도 태백의 첩첩산중 대덕산(1307m)이다. 이곳에는 밤하늘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야생화 길이 숨어 있다.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원시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앓다 튀 알록달록한 야생화가 피어난다.

금대봉, 분주령을 거쳐 대덕산으로 이어지는 4시간 산행은 가슴으로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지나간 듯 온몸이 상쾌해지는 기분이다. 여기에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까지, 대자연이 빚어낸 지상 최고의 화원을 걷다 보면 이래저래 일상에 시달려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내딛는 발걸음도 가볍다.

백두대간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둔 비밀의 화원

1,000m가 넘는 산이라고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백두대간 능선의 한 고개인 두문동재(싸리재, 1,268m)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근처까지는 차로 이동하면 된다. 두문동재를 거쳐야만 야생화 정원에 들어갈 수 있다.

대덕산 일대는 1993년 환경부가 국내 최초로 자연생



금대봉

태계 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래서 두문동재 탐방안내소에서 알려주는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트레킹 코스를 벗어나거나 산에서 꽃이나 나물을 뜯지 말아야 하며, 외래종이 유입될 수 있어 산행 전에 등산화 바닥을 잘 털어야 한다. 그런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다.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한 곳이다.

두문동재에서 시작한 산행길은 금대봉·분주령·대덕산을 차례로 거쳐 한강 발원지 검룡소까지 이어진다. 약 9.4km, 4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통상 6시간 정도 예상하는 것이 좋다. 길옆에 핀 야생화를 보느라 자주 걸음을 멈춰 서다 보면 시간이 더 늘어난다. 키 작은 야생화들이 군락을 이루며 꽃망울을 터트리는데 꽃꽂이 서서 버틸 재간이 없다. 몸을 낮춰 꽃들과 눈을 맞추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흐른다.

대덕산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이다. 노랑무늬붓꽃·복주머니란·갈퀴현호색 등 찾아보기 힘든 희귀식물 등 자생하는 풀꽃이 1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



뽕뽕한 나무숲

여 종에 달한다. 높은 고원지대라 봄 야생화가 만발하는 시기는 평지보다 늦은 5월이다. 이맘때면 쥐오줌풀·홀아비바람꽃·미나리아재비·광대수염·뿔장대·풀솜대·금강나리·개별꽃·구슬봉이·웨리바람꽃 등 이름도 예쁜 봄꽃이 초원을 별처럼 수놓는다.

산행길은 그리 험하지 않아 거창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물과 간단한 간식거리를 넣은 배낭과 트레킹화 정도면 충분하다. 산을 오르는 등반이 아닌 울창한 산림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산을 내려오는 순탄한 길이라 생각하면 된다.

탐방안내소를 지나 임도로 들어서면 드디어 야생화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된다. 임도는 제법 넓지만, 길은 점점 깊은 숲속 오솔길로 이어진다. 신록이 우거져 하늘이 잘 보이지 않고 사람 하나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좁다. 길 잃을 걱정은 안해도 좋다. 내내 국립공원 환경해설사들이 동행한다.

하늘을 가린 원시림과 길옆에 핀 우리 꽃들

이제부터는 길옆으로 발길이 닿는 곳마다 키 작고 소

박한 야생화가 지천이다. 특히 금대봉에서 분주령까지 약 3.5km 구간이 천상의 화원이라 불리는 하이라이트 구간이다. 복수초, 얼레지, 엉겅퀴, 노루귀, 바람꽃류 등 수많은 꽃들이 장관을 연출한다. 생소한 풍경에 기분이 묘하다. 도시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날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그렇다고 너무 기분에 취하지는 말 것. 오솔길을 벗어나 행여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작고 소중한 꽃을 밟을 수 있으니까.

숲길로 이어진 습한 비탈길을 조금만 내려가면 작은 웅달샘을 만난다. 아름답리 신갈나무 아래에서 솟아나는 샘물의 이름은 고목나무샘이다. 평범해 보이지만 의미가 깊은 샘이다. 바로 한강의 근원이 되는 첫 샘물이기 때문이다. 이 물은 땅속으로 흘러들었다가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에서 다시 솟아난다.

고목나무샘에서 다시 햇살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원시림 사이로 1시간 정도 더 가면 분주령으로 이어진다. 분주령은 인제의 곰배령과 함께 국내의 대표적인 야생화 군락지다. 함백산과 대덕산을 잇는 능선길로 해발 1,080m



에 너른 분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능선을 따라 곧장 오르면 대덕산 정상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주변이 확 트여 백두대간 줄기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멀리 은대봉과 함백산의 산줄기가 겹겹이 병풍을 이루고 구름이 산 정상과 능선을 감싸 안고 있다.

대덕산 정상 주변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고산초원으로 야생화 세상이다. 긴 대 끝에 흰 꽃송이들을 모아 올린 범꼬리꽃 군락지로 유명하다. 아래로 드넓게 펼쳐



앵초(위)와 벌개데기꽃(아래).

진 초원능선에는 수많은 들꽃 무리가 밤하늘 은하수처럼 빛을 흩뿌리고 있다.

초원능선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산행의 종착점인 검룡소로 이어진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뻘뻘이 들어선 침엽수림 사이로 완만한 내리막길이 이어진다.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다. 울창한 숲속, 푸른 이끼가 가득한 바위 웅덩이에서 하루 2천~3천 톤의 지하수가 석회암반을 뚫고 솟구친다.

암반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물줄기는 영락없이 용이 하늘을 날기 위해 용틀임하는 모습이다. 서해에 살던 이 무기(검룡)가 용이 되려고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와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전설에 따라 ‘검룡소(儉龍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 물은 정선의 골지천과 조양강, 영월의 동강을 거쳐 단양, 충주, 여주로 흘러가고 경기도 양수리에서 비로소 한강이 되어 수도 서울을 관통한다.

피천득 선생은 ‘5월’이란 시도 남겼다.

신록을 바라다 보면/내가 살아있다는/사실이 참으로 즐겁다/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찾아가기

- 분주령 야생화길은 야생화가 만개하는 4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9월 말까지 개방하며, 국립공원공단 태백산 예약통합시스템에서 미리 예약해야 한다. 하루 300명(1인당 10명 예약 가능)만 입장 가능하다. 생태경관보존지역이어서 탐방로 이외의 구간은 출입이 통제된다.
- 교통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두문동재 주변에 차를 세워두고 원점회귀해야 한다. 고속버스나 철도를 이용할 경우 태백시내에서 두문동재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종착점인 검룡소에서는 태백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한다. 버스는 자주 없어 미리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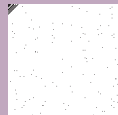


새들이 걸리는 감기 ‘조류 바이러스’

얼마 전 미국에서 ‘조류독감’ 확산으로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 흔히 독감에 걸려 고통받는 경우라고 하면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사람 이외에 동물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 동물, 특히 새들이 걸리는 독감을 가리켜 조류 독감(Avian Influenza), 줄여서 AI라고 부르는데 의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조류 독감은 글자 그대로 닭과 오리와 칠면조 같은 새들이 걸리는 병으로, 190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처음 보고됐다. 조류 독감은 기러기 같이 야생에서 사는 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로 닭과 오리와 칠면조 같은 가금류들과 접촉하면서 순식간에 확산된다.



조류 독감은 주로 가금류를 가둬놓고 키우는 곳에서 자주 발생한다. 그 이유는, 우선 새들을 좁은 곳에 공장 식으로 잔뜩 가둬놓고 키우는 데다 사육장은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며, 새들이 배설하는 분뇨를 깨끗하게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나빠 그만큼 조류 독감이 창궐하기 알맞은 환경이 된다.

그리고 이런 가금류들을 키우거나 관리하는 농부와 사육사들도 가금류와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조류 독감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들의 배설물은 감염의 주요 매개체다.

조류 독감은 2020년에 발생해 아직도 전 세계에 창궐 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전염성이 낮다. 2003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 조류 독감이 사람한테 감염된 사례는 640건 보고됐다. 그나마 이런 경우는 이미 조류 독감에 감염된 새와 접촉한 사람들이 주로 걸렸으며, 사람 사이에서 조류 독감에 감염된 경우는 그 수가 낮은 편이다. 2013년에는 중국에서 조류 독감이 유행해 400명 이상이 감염됐다.

다만 감염 확률이 낮다고 결코 조류 독감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다.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세계 의학계에 보고된 조류 독감에 걸린 사람들 중 사망한 경우는 총 238건이다.

조류 독감에 감염되었을 경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과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뒤따른다. 여기에 더해 설사 같이 내장 쪽에 병이 생기거나 두통 및 의식 저하 같은 중추신경계 관련 질병도 걸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증상이 더 악화된다면 인공 호흡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해지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조류 독감에 대해서는 이미 예방과 치료법이 나와 있다. 우선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조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삼간다. 또한 닭이나 오리 및 기러기 같은 새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특히 새들의 배설물에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조류 독감이 새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새들의 배설물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치킨, 조류독감 걱정 없어

또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새로 만든 요리를 먹을 때에는 반드시 뜨거운 열에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 한 예로, 닭을 튀겨서 만드는 요리인 치킨의 경우는 약 150도 이상의 끓는 기름에 잔뜩 담가서 조리하기 때문에 조류 독감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부 사람들이 닭이나 꿩 등의 가금류 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회를 즐기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조류 독감에 걸릴 위험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조류 독감에 감염되었다면, 치료제로 오셀타미비어(oseltamivir), 아만타딘(amantadine), 리만타딘(rimantadine)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 이러한 치료제들은 조류 독감에 걸려 그 기능이 약해진 사람 몸 속 장기들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

글 도현신 작가



김종학, '설악의 숲', 500x150(h)cm, Oil on Canvas, 1997

생명이라는 위대한 서사

자연은 회화의 소재나 주제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유수의 예술가들은 자연, 특히 산을 다뤄왔다. 산에는 물과 흙과 바위, 나무와 풀꽃들이 있다. 표현주의적 경향의 추상회화 세계를 펼쳤던 김종학은 생명 현상에 주목해 실존의 문제를 다뤘다. 그는 산을 찾아 세상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 1979년부터는 설악산 아래 설악동에 살면서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설악산 화가가 되었다. 설악에서 살아온 김종학은 자연의 화가다. 김종학 그림의 핵심어는 '생명력'이다. 자연의 생명 의지와 현상을



담아내는 그는 자연 속에서 구상과 추상을 발견한다. 풀과 나무, 바위, 새, 꽃 등의 자연물 표현은 당연히 형상을 구축하는 구상회화이지만, 그 속에서 그는 구도와 색채와 질감 등 미술 본연의 추상 의지를 드러낸다.

김종학 그림에는 생명의 우주론이 담겨있다. 원근법을 이용한 대상 묘사가 아니라 자유로운 대상물 배치를 통해 사물 하나하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의 그림에서 만물은 평등하게 공존한다. 서양 회화의 가장 큰 특징인 원근법은 김종학 그림에서 크게 중요

하지 않다.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멀리 있는 사물 모두 그의 화폭에 안착하는 순간 모두가 빛나는 주인공으로 한 자리씩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장과 생략이라는 추상화 과정과도 만난다. 그의 세계는 생명현상을 통해 우주적 사유를 이끌어내는 성찰의 예술이다. 그는 설악산이라는 자연환경에서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찾아낸다. 이런 맥락에서 그의 자연 그림은 특수이자 보편이며, 개별에서 우주를 재발견하는 일이다. 그의 자연은 낱알의 화려함은 물론이고 그 화려한 개별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되는 축제의 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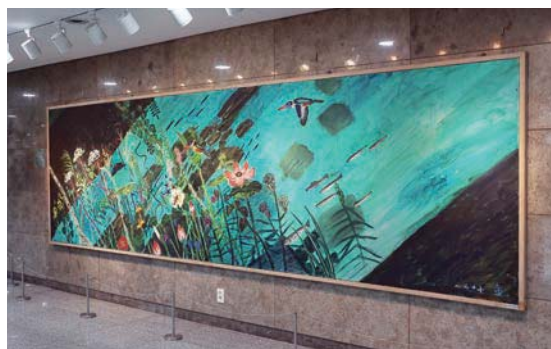
설악산의 자연을 담은 생명 예찬의 극치

김종학의 1997년 작, '설악의 숲'은 가로 5미터에 달하는 대작 페인팅이다.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 자리잡은 이 그림은 설악산의 자연을 담은 생명 예찬의 극치다. 거대한 화폭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흐르는 계곡물 속에 물고기가 유영하며 그 위로 바위와 새와 풀과 꽃이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는 설악의 풍경은 절경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매일매일 사건이다. 생명의 역동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사건에 경의를 표하는 김종학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에 집중해 그것을 회화 작품이라는 물질 구조에 담아 우주적 서사로 재구성한다. 낱알의 이미지들은 움직임의 순간들을 포착한 것인데, 비록 고정되어 있는 물감 덩어리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의 역동을 담아내 정중동의 감흥을 전달한다.

김중학 작품 비평에서 빠질 수 없는 화두는 전통이다. 흔히들 전통회화의 맛을 먹그림에서 찾곤 하는데, 알고 보면 한국 전통회화의 진한 맛은 채색화에서 나온다. 오방색의 철학으로 강렬한 상징체계를 구축해온 전통회화의 정신을 김중학은 자유분방한 풍경 그림 속에 담아냈다. 청백적흑황(淸白赤黑黃)의 오방색은 인문의 색채학이자 자연의 색채학이다. 오방색의 체계는 좌우와 상하 그리고 중앙의 방위를 나타내며, 하늘과 땅의 음양(陰陽)에서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행으로 연결하는 우주 질서를 담은 세계관의 표현이다. 나아가 그것은 자연 속에서 발굴/발견해낸 색이니 당연히 자연으로부터의 색채학이며, 자연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색채학이기도 하다.

전통회화의 강렬한 채색 방법론 풀어내

오방색 체계를 토대로 하는 전통회화는 과감한 보색 구도로 강렬한 화면을 구축한다. 초록 풀잎과 빨간 꽃은 대표적인 보색인데,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이 강렬한 보색대비를 회화술로 채택한 것이 전통회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김중학은 자연을 그리면서 자연스럽게 전통회화의 강렬한 채색 방법론을 풀어낸다. 이른바 서양화의 기법으로, 일면 서양화로 분류되어온 회화술의 화가 김중학이 전통회화의 맛과 멋을 추구하는 것은 서구적 근대화의 극복이라는 대전제 안에서의 일이다. 그것은 아무리 서양화 영향을 받은 그림이라도 이제 100년의 시간이 지났으면



국회 의원회관 입구에 걸려 있는 김중학의 '세계의 색'

한국의 그림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의 서양화'라는 역설을 넘어서기 위함이다.

김중학의 설악 연작은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의 눈부신 격변을 고스란히 담아낸 표현물이다. 표현주의 화풍으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는 김중학은 마치 아이들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형상과 색채 구성으로 일관한다. 그의 붓질은 머뭇거리임 없이 대담하고 자유롭게 캔버스를 누빈다. 그림에 가까이 다가서면 거칠게 드러나 보이는 물감 덩어리들의 혼재인데, 조금씩 뒤로 물러서면 개별 요소들의 조화와 균형이 뚜렷해지면서 형태와 색채를 알아챌 수 있는 형상 인지. 이것이 그림 보는 맛의 기본인데, 김중학 그림은 이렇듯 가장 원천적인 그림 보기의 즐거움을 선사하곤 한다. 살아 꿈틀거리는 그림에서 '생명이라는 위대한 서사'를 만나는 하나의 사건. 김중학 예술이 가져다주는 고마운 선물이다. 🍵

글 김준기(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십자군과 몽골군의 공격에서 이슬람 세계를 구해 낸 이집트의 투르크계 맘루크 왕조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 하나인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인류 역사상 최초 문명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다. 피라미드와 �핑크스와 같은 고대 왕조의 유적에서 볼 수 있듯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와 아프리카-아시아 및 지중해-인도양을 잇는 육해상 루트로 번영을 누렸던 이집트는 페르시아, 로마, 이슬람, 오스만 제국, 프랑스 및 영국 같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13세기부터 이곳에 돌궐의 후예, 투르크족 출신 군인 집단인 맘루크(Mamluk) 왕조가 건설되어 수 세기에 걸쳐 세계사에 족적을 남긴 것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맘루크 왕조의 수립과 번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슬람 세계에서 널리 유행하던 ‘군사 노예’ 제도인 맘루크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슬람 제국이 아라비아를 거쳐 시리아, 북아프리카, 스페인, 이란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석권한 후 이슬람의 정치-종교 지도자 칼리프들은 자신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친위대를 구성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부족 집단의 영향력이 컸던 아랍인들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외부에서 영입해 오로지 군주에게만 충성을 바치는 병사들을 모집하기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중앙아시아의 기마 민족 출신의

로 뛰어난 무예를 갖추었던 돌궐-투르크인들이 선호됐다.

칼리프 친위대로 복무한 돌궐-투르크 군사 노예 맘루크

그런데 돌궐-투르크인들로 구성된 친위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매우 독특했다.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돌궐-투르크인들과의 전쟁 속에서 포로로 사로잡힌 병사들이나 혹은 돌궐-투르크계 청소년을 납치해 노예로 삼은 뒤 이들을 이슬람 군주 칼리프가 구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데려온 돌궐-투르크 군사 노예를 맘루크라고 불렀다. 무슬림 세계로 유입된 돌궐-투르크계 청년들은 다른 선임 맘루크들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이슬람으로 개종해 칼리프의 친위대로서 복무하게 되었다. 이들 투르크 출신 군인들은 투르크어를 계속 사용했고 말타기나 활쏘기 같은 투르크인의 풍속을 유지했다. 맘루크 군단은 이슬람 세계가 10세기경 이라크-이란 중심의 순니파 압바스조(Abbasid) 칼리프국과 북아프리카 중심의 시아파 파티마조(Fatimid) 칼리프국으로 분열되면서 파티마조의 본거지였던 이집트 지역에도 등장하게 된다.

이집트의 맘루크 군단이 왕조를 창건한 데는 12~13세기 내내 지속된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유럽 연합군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하면서 파티마 칼리프조는 몰락하고 대신 살라딘(Saladin, 아랍어식 표현으로는 살라흐 앳 딘 Salah al-din)으로 잘 알려진 무슬림 전사가 이끄는 아유(Ayyub) 왕조가 수립된다. 그러나 살라딘 사후 혼란이 지속되고 십자군에 맞서 싸우던 아유 왕조가 붕괴되면서, 1250년 투르크 노예 출신 맘루크 장군 아이벡(Aybek)과 그의 부하 쿠투즈(Qutuz) 및 바이바르스(Baybars)가 정권을 장악하고 맘



루크 왕조를 창건한다.

이슬람 종교 지도자 칼리프가 유지되는 데 큰 공헌

맘루크 왕조는 십자군뿐 아니라 1260년 몽골 제국의 공격을 막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유라시아 전역을 제패한 몽골 제국은 1258년에는 칭기즈칸의 손자 훌레구(Hulegu)의 지휘 아래 대규모 병력을 서아시아로 파견했다. 훌레구의 군대는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슬람 세계 종교지도자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칼리프를 처형함으로써 무슬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맘루크 군은 1260년 훌레구의 부장 키트부카(Kitbuqa)가 이끄는 몽골군을 오늘날 이스라엘 북부의 아인잘루트(Ayn Jalut)에서 격파했을 뿐 아니라 몽골 군대의 지속적인 공격을 막아내어 몽골 제국의 서진을 저지한다. 무엇보다 맘루크 왕조는 압바스 칼리프조의 후예 가운데 한 명을 칼리프로 추대해 몽골 제국에 의해 맥이 끊긴 이슬람 종교 지도자 칼리프가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한편, 맘루크 왕조는 돌궐-투르크계 군사 노예 제도



를 기반으로 군사력을 유지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돌궐-투르크계 노예들을 중앙아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몽골 제국이 이란-중앙아시아를 점령한 이상 기존 루트를 통해 인원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다른 경로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바로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크림 반도를 통해 흑해-지중해로 지나는 해상로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당시 몽골 제국의 분열 양상과 관계가 깊었다. 13세기 후반기부터 칭기즈칸의 막내아들 툴루이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중국의 원나라와 이란의 일칸국에 대항해 칭기즈칸의 첫째아들 주치와 둘째아들 차가타이의 후손들이 다스리던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지방의 금장(金帳) 칸국 혹은 킵차크(Qipchaq) 칸국 사이 전쟁이 장기간 지속됐다. 따라서 이란의 일칸국과 적대 관계였던 맘루크 왕조는 또 다른 몽골 제국의 분파이면서도 이란의 몽골 인들과 갈등을 빚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초원의 금장 칸국과 동맹을 맺고 이들을 통해 투르크계 노예를 공급받았다.



맘루크 시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이집트 카이로의 술탄 하산 모스크(출처 Dennis Jarvis)

제노바·베네치아 상인, 맘루크의 노예 수송 역할 담당

이러한 맘루크의 노예 수송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이들이 바로 이탈리아의 제노바와 베네치아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흑해 북안 크림반도에 카파(Caffa, 오늘날 크림반도의 페오도시야)와 같은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당시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을 경유해 돌궐-투르크 청년들을 노예로 삼아 이집트로 실어 날랐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의 문물을 접한 이탈리아 상인들은 유럽에 문예부흥 운동 르네상스(Renaissance)를 일으키게 된다.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르네상스는 14세기 중반 흑사병의 창궐로 폐허로 변한 유럽 사회가 다시 일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흑사병이 유럽에 전파된 계기 자체가 1346년 크림반도의 제노바 식민지 카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이집트에 자리잡은 돌궐-투르크계 왕조인 맘루크 왕조는 13~14세기 세계사를 바꾼 주역이었다. 이슬람 세계를 십자군과 몽골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했으면서도 이탈리아 상인들의 르네상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맘루크 왕조는 또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 왕조인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 1517년 멸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의 지도층으로 남아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이집트 점령 시기까지 이집트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중앙아시아 출신의 투르크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면서도 유럽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맘루크 왕조가 갖는 역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

글 이광태(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일러스트 윤소영(soyoungyun.com)

우리말 안에 스민 영어를 어찌할 것인가

요즘 들어 점심을 먹고 잠시 짬이 나면 거리를 걷는 것이 새로 발견한 즐거움이다. 주변의 숲길을 걷는 것도 좋지만, 오미크론의 그림자가 조금씩 열리는 느낌 때문인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걷는 즐거움도 제법 쏠쏠하다. 그럴 때면 간판에 영어가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곤 한다. 영어 철자를 노출해서 쓴 간판도 많지만 우리말로 표기했을 뿐 실상은 영어인 간판도 많다.

우리는 한문에서 일본어로 공용어가 바뀐 적이 있는 비극적 역사를 경험했다. 이 때문에 우리말에는 일본말의 잔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지금도 그 잔재를 털어버리기 위해 애를 쓴다. 여전히 그 노력을 해야겠지만, 이제는 제법 일본말의 흔적을 많이 지웠다. 단어나 문장에서도 일본어의 영향을 벗어나자는 주장이 꾸준히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런데 일본어의 영향이 사라진 자리에 영어가 들어와서 자리잡았다고 하면 과장일까? 다른 언어의 유입은 대체로 자신보다 큰 권력을 지닌 집단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언어는 사회의 권력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영어가 가진 다양한 권력 및 문화가 우리말 속으로 함께 들어왔을 것이다. 웬지 모르게 유식해 보이고 깊이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영어를 섞어서 쓰는 것일 텐데, 그 이면에는 바로 언어의 문화 권력관계가 스며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보면 우리 언어생활에서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어 단어를 섞어서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서도 이런 현상은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최근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개선 요구와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방송은 이러한 수요자 니즈의 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양적 성장만이 아닌 방송미디어 접근성의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이 글에서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 이후’로 써도 의사 전달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 ‘수요자 니즈’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의 단어를 겹쳐서 쓴 것이다. ‘니즈’라는 단어에 이미 ‘수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니즈’를 ‘수요, 바람’으로 바꾸어 쓰기를 권고하고 있다), ‘수요자 니즈’라고 하면 ‘수요자의 수요’라는 의미가 되므로 이상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수요자의 요구’라고 하면 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어쩌다 영어를 잘하는 것이 한 인간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사회에 살게 되었을까. 서로 다른 문화가 교섭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언어가 뒤섞이면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우리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다른 언어를 만난다면 더욱 새로운 언어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등 법안 의결, ‘국회박물관’ 개관 기념식 개최

- 4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차기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 지명
- 4월 6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자 하향법’, ‘동물학대 방지법’ 등 법안 13건 의결
• 정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 의결
- 4월 7일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당 대표로 있는 새로운물결과 합당 공식 선언
- 4월 8일 •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 선출
- 4월 10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내각 인선 발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추경호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숙 전 의원)
- 4월 11일 • ‘국회박물관’ 개관 기념식 개최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영상 연설
•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성일종 의원, 원내수석부대표에 송언석 의원, 원내대변인에 박형수·양금희 의원 임명
- 4월 13일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검사장, 외교부 장관에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에 권영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상민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지명
- 4월 14일 • 여야,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해 실시하기로 합의
- 4월 15일 •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특검법’ 등 법안 12건 의결
- 4월 18일 •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공식 선언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입법 추진에 대해 “반합법적 입법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
- 4월 19일 •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법’에 대해 여야 간 쟁점을 해소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 기획재정위원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 4월 20일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꾸려 미비점을 보완하자”고 제안
- 4월 22일 • 여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법’ 중재안 합의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
- 4월 25일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
- 4월 27일 •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법안 의결
• 검찰개혁법안 본회의 상정, 여야 의원 필리버스터 나서

정리 윤성혜

국회 ART GALLERY 5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KIM25 - Poem of May

2022. 5. 2. - 5. 13.



작가 : 김25 / 추천 : 이용빈 의원

먹물의 밝은 태양을 기리며

2022. 5. 16. - 5. 30.



작가 : 최애순 / 추천 : 이춘석 국회의원총장

- 편집후기 -

새 봄과 함께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일상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버텨온 사람들이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 설수 있도록 국회보도 마음을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5월을 기원합니다.

- 김현아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SNS 등이 사태 양상에 큰 영향을 미쳐 미래전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평화의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 고영선

하늘은 푸르고 지갑은 투명해진다는 5월이 왔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챙기느라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날’을 핑계로 쑥스럽지만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 박민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앞두고 밖에서도 가족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독자여러분도 행복한 가정의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 윤성혜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